

Issue Paper

2008. 9. 23.

재정적자 팽창과 일본경제의 미래 - 인구감소와 재정전망을 중심으로 -

목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일본의 재정개혁 목표와 전망

III. 일본의 장기 재정 전망

IV. 일본의 과제와 시사점

부록 1. 일본의 재정 전망

부록 2. 일본의 FTA 전략

작성 : 구본관 수석연구원(3780-8140)
bkkoo@seri.org
김선빈, 강성원, 이동원 수석
감수 : 김경원 연구위원(3780-8040)
alexkkim@samsung.com

《 Executive Summary 》

1990년대 중반까지 세계 2위의 경제강국이었던 일본이 급속한 고령화와 재정적자 누증 및 성장력 저하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국가채무는 GDP의 180%를 상회하여 구미 선진국 평균인 70~75%의 2배를 넘어섰고, 재정적자 또한 선진국 중 최악 수준인 GDP의 3.4%에 이른다. 게다가 1995년 18%에 육박했던 일본경제의 세계경제 비중은 절반 가량으로 축소되었고, 2011년 경에는 중국경제에 역전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조락에는 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도 재정정책 실패라는 정책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버블 붕괴 이후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경기부양 목적의 공공사업에 124조엔을 투입하였고, 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해 44조엔에 달하는 감세도 실시했다. 여기에도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은 1990년 이후 15년간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출 확대와 감세는 곧 재정악화와 국가채무 누적으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정부와 국민은 저금리정책이 가져다준 이자부담 경감 효과에 매몰되어 재정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고이즈미 정권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개혁전략을 추진하면서 세출 삭감, 정부자산·부채의 구조조정에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맞물려, GDP 대비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등 일부 성과가 시현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권당 내부에서 성장중시론과 재정재건우선론 간 대립이 심화된 데다, 후쿠다 총리의 조율과 실천전략 미흡으로 인해 재정재건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40% 이상 감소하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동은 고령화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려 사회보장지출을 팽창시키고, 빠르면 2010년대 후반, 늦어도 2030년대 후반에는 잠재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재정운용에 대한 특단의 개혁이 없는 한 일본재정은 파탄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결국 일본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FTA 등 대외개방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경직적 사회보장지출의 통제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역내에서 경제규모에 걸맞는 리더십 부재, 농업 및 지역주민 표를 의식하는 의원들의 정치행태 등 정치 시스템의 한계가 '열린 국가'를 향한 일본의 전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정책당국의 미온적 태도에 보호주의 및 배타주의가 팽배한 정책운용이 가세하여 해외 노동력의 활용이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경쟁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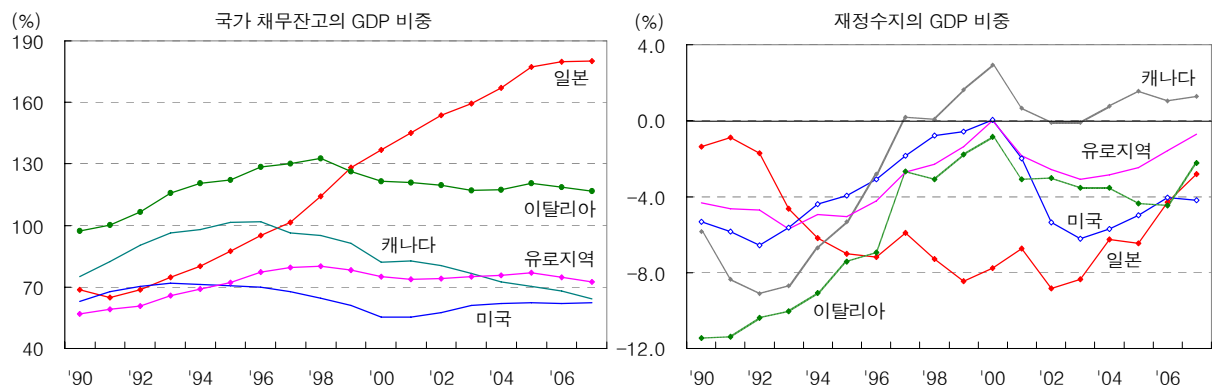
일본의 재정운용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선 재정지출의 효율화이다. 한국도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최근 10년간 평균 22.6%에 이를 정도로 빠르고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비효율적인 경제지출을 삭감하고 사회보장지출의 급팽창을 제어해야 한다. 아울러 안정적 세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전방위적인 FTA 등을 통해 '안팎으로 열린 국가'를 지향하면서 해외시장과 자원을 성장의 추진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요 약 》

I. 연구 배경 및 목적

- 일본은 국가채무잔고(2007년 말 기준)가 GDP의 180%를 상회하고, 재정적자 또한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GDP의 3.4%)
- 불안한 재정 상태는 향후 일본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
 - 재정적자 확대 → 채무상환비 증가 → 예산운용 제약·금리 상승 → 자원배분 및 경제안정화 기능 위축·재정의 지속가능성 회의 → 투자·소비 위축
 - 재정적자 누적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관련 비용 증가가 가세하면서 일본경제의 성장력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

국가채무잔고 및 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중 추이



자료: OECD (2007). *OECD Economic Outlook*, (NO. 82).

- 본 보고서는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 및 경제성장력 저하 원인 분석과 함께 재정구조 건전화의 조건 및 성장력 회복의 수단을 모색
- 소비세, 경제성장률, 사회보장지출 등 재정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
 - FTA 체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외국인 인력 유입 확대 등 경제성장력 저하를 극복할 수단을 탐색하고, 정책 효과를 진단
 - 한국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

II. 일본의 재정개혁 목표와 전망

1. 재정현황 및 문제점

- 일본의 총예산(중앙정부 일반회계+ 중앙정부 특별회계+ 지방정부 예산)은 대략 270~290조엔으로 GDP의 55~60% 수준
 - 특별회계로 인해 계정 간 중복이 많은 데다 회계제도 간 非정합성으로 인해 외부에서 정확한 예산 수치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조세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세출이 65% 수준에 불과해, 세입의 30% 이상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는 구조
 - 일반회계 누적적자의 GDP 비중: 36.3%(1991년) → 106.1%(2007년)
- 일본 재정악화의 원인은 정부가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병행한 데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확대가 가세
 - 버블 붕괴 이후 1992~2000년간 9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며 주로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124조엔에 달하는 추가 재정을 투입
 -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 규모가 1994년 이후 9년간 약 44조엔
 -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지출도 1990년 16조엔에서 2005년 30조엔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지출 요인이 크게 확대
 - 제로 금리에 가까운(1999년 0.15%)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이 경감되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 재정위기에 둔감
 - 세출 대비 국채이자 부담: 17.0%(1991년) → 10.9%(2006년)
 - 국채만기가 도래하면 차환발행하고, 금융기관과 국민은 이를 매입하는 행태를 반복하며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총채무잔고가 1천조엔 초과

2. 재정개혁의 목표와 성과 평가

- 고이즈미 정권 이후 경제성장과 재정개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기본방침 2006년」에 입각하여 2단계 재정재건 전략을 추진
 - 1단계는 2011년 기초재정수지를 흑자화하는 것으로서 세출 삭감이 핵심
 - 2단계는 2010년대 후반까지 장기금리 이상의 경제성장 달성 또는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삭감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잔고를 안정적으로 축소
- 기초재정수지 면에서는 개혁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으나 성장과 재정재건 간 정책적 충돌과 세출 삭감의 어려움 등으로 개혁의 추진력이 약화
 - 지속적인 세출 삭감과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에다 자산·부채의 슬림화를 통한 국채이자 부담 경감 및 신규 공채발행 감소가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
 - 기초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중: -4.2%(2003년) → -0.9%(2007년)
 -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11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
 - 2007~2011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이 당초 3.2%에서 2.3%로 하향 조정 → 2011년 기초재정수지의 GDP 비중 전망: 0.2% → -0.1%
 - '성장중시'와 '재정재건중시' 노선이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후쿠다 총리의 양자 병행을 위한 실천 전략이 미흡해 정책 추진력이 저하
 - 중앙은행 총재 임명 파동, 휘발유세 잠정세율 연장안 부결 등 정책혼선
 - 사회보장지출 증가, 공공투자 및 기타 경비 감축 노력의 실패 등으로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 세출 삭감이 필요하나, 국민의 저항으로 실현이 난망
- 인구구조, 경제성장, 재정 문제가 맞물려 해결책을 찾기 어려움
 - '인구 감소·고령화 → 경제성장률 저하·사회보장지출 증가 → 재정수지 악화 → 증세 → 경제성장률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

Ⅲ. 일본의 장기 재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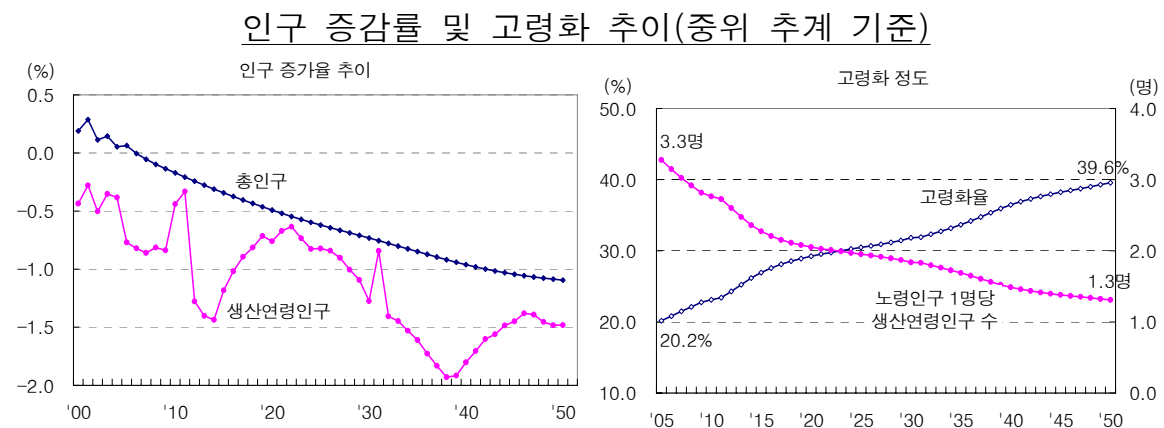
1. 인구 및 경제성장률

□ 일본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총인구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세가 예상

- 총인구: 1억 2,777만 명(2005년) → 9,515만 명(2050년)

· 생산연령인구(15~65세): 8,442만 명(2005년) → 4,930만 명(2050년)

- 특히,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율(연평균 1.2%)이 총인구 감소율(同 0.6%)의 2배로 고령화의 가속과 함께 피부양인구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



자료: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平成 18年 12月 推計)”.

□ 고령화의 가속으로 사회보장 관련 부담이 급증하여 재정을 압박하는 한편, 경제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하여 2020년을 전후해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

- 고령화율과 사회보장비지출 증가와의 상관관계는 밀접(상관계수: 0.99)

- 지금까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분 이상의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향후 생산성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분을 상쇄하는 데 한계에 봉착할 전망

· 일인당생산성 증가율은 0.9% 수준에서 정체, 인구감소율은 향후 가속

- 통상적인 개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2. 재정 전망

□ 사회보장지출, 소비세율, 잠재성장률의 3개 변수에 따라 18개 시나리오를 예측해본 결과^{<1>} 일본 재정의 장기 전망은 대체적으로 비관적

- 18개 시나리오 중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2>}되는 경우는 5가지

- 시나리오 4: 잠재성장률이 Base Line^{<3>}일 때, 소비세를 10%로 추가 인상하는 동시에 사회보장비지출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억제되는 경우
- 시나리오 7: 잠재성장률이 Base Line보다 0.3%p 증가하고 사회보장비지출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억제되는 경우(소비세의 추가 인상 없이도 가능)
- 시나리오 10, 11, 12: 잠재성장률이 Base Line보다 0.3%p 증가하고 소비세를 10%로 추가 인상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비 증가 속도에 관계 없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시나리오별 기초재정수지 및 공채잔고의 GDP 비중 추이

-			잠재성장률					
			Base Line		0.3%p 증가		0.3%p 하락	
			재정수지	공채잔고	재정수지	공채잔고	재정수지	공채잔고
소비세	인상 후 동결	사회보장비1	¹ +	발산	⁷ +	안정	¹³ +	발산
		사회보장비2	² +	발산	⁸ +	발산	¹⁴ -('32)	발산
		사회보장비3	³ -('36)	발산	⁹ -('48)	발산	¹⁵ -('27)	발산
	추가 인상	사회보장비1	⁴ +	안정	¹⁰ +	수렴	¹⁶ +	발산
		사회보장비2	⁵ +	발산	¹¹ +	수렴	¹⁷ +	발산
		사회보장비3	⁶ -('48)	발산	¹² +	안정	¹⁸ -('39)	발산

주 1: 각 항의 번호는 시나리오 번호, ()안 연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기를 표시

2: 사회보장비 1, 2, 3은 사회보장비 추계 시 사용한 독립변수에 따른 구분으로서, 사회보장비1=f(고령화율), 사회보장비2=f(GDP), 사회보장비3=f(추세선)을 나타내며, 사회보장비1이 가장 완만하고 사회보장비3인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냄

3: 공채잔고는 GDP 비중으로, 발산은 증가세 지속, 안정은 현상 유지, 수렴은 하락세

<1>사회보장지출(3가지 경우), 소비세율 인상(2가지 경우), 경제성장률(3가지 경우)의 3개 변수를 토대로 18개 경우를 예측(보다 상세한 예측 결과는 '요약의 부록' 또는 본문을 참조)

<2>기초재정수지 흑자화와 국가채무(GDP 비중)의 현상 유지를 동시 달성

<3>정부가 기존의 경제·재정개혁 노선을 견지한다는 전제하에,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에 입각한 성장률 추계치(미즈호總合研究所 (2007). "日本潜在GDP의 長期推計". 『미즈호總研論集』, III号.)

-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잠재성장률을 제고함으로써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것임
- 현재의 인구구조에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은 일본정부가 기존의 경제·재정개혁 노선을 견지하는 경우, 2010년대 이후 기초재정수지는 흑자화를 유지하겠지만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발산
 - 국가채무잔고를 GDP의 일정비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 등 추가적인 세원 확보가 필요하지만 국민의 저항으로 어려움이 예상
- 잠재성장률이 '당초 예상(Base Line)'보다 제고될 경우에는 소비세율 인상 없이 재정지출 삭감만으로도 재정의 건전화 수단을 확보
 - 이 경우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 등의 정책적 수단과 소비세율 인상을 병행할 수 있어 증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 극복이 비교적 용이
- 반대로 잠재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초재정수지 적자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재정 파탄 가능성도 증폭

IV. 일본의 재정과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재정개혁을 위한 정책과제와 한계

- 일본경제는 1990년대 장기 불황을 거치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17.9%에서 2007년 8.1%로 하락
- 일본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중국경제가 빠른 속도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1년에는 중·일 간 경제규모가 역전될 전망
- 2007년 일본의 일인당 GDP는 3만 4천달러로 과거 최고였던 1995년 4만 2천달러에 비해 약 20% 하락하였고, OECD 국가 중 20위에 불과

□ 내적 성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개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제기

-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한 2011년 이후 국가채무잔고를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원 확보가 불가피한데, 이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인구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도 용이하지 않은 데다 20~30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노동과 교육을 기피하는 풍조가 폭넓게 확산되는 것도 문제
 -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출생)의 은퇴 이후 여러 가지 사회문제 발생, 비정규직 고용 증가(프리터족과 니트족)로 인해 노동력의 질 저하가 우려
 - 이공계 기피 등의 현상도 내부적 성장력 확충에 제약
- 급속한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성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생 방안 모색이 불가피
 -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할 중국, 인도, ASEAN 등의 동아시아를 성장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FTA(EPA)를 추진하자는 주장 대두

□ 정치 시스템의 결함과 정책효과의 제한으로 대외개방 전략의 난항이 예상

-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FTA와는 별도로 ASEAN 전체와 FTA를 체결하는 이중 방식을 채택
 - 그 결과 개별 국가와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어도 ASEAN과의 양허 수준이 더 낮아 무역효과가 왜곡될 소지가 다분
- 고이즈미 정권의 '아시아 輕視主義的 외교 노선',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 등이 아시아 내 일본의 외교적 기반을 약화시켜 일본 기업의 이미지에 악영향
- 농업 및 지역 선거구민을 의식한 의원들의 득표전략이 일본식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와 맞물려 '열린 국가'를 향한 일본의 행보에 걸림돌

-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이 동아시아 통합을 술선하여 이끌어내고, 일본시장의 문호를 실질적으로 개방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

□ 노동력 감소 대응책으로 실행한 해외 노동력 활용도 효과가 제한적

- 199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 연수·기능실습생 등을 중심으로 해외인력이 빠르게 유입됐으나 2005년 현재 불법취업자까지 포함하더라도 100만명 수준
-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입을 촉진하고 있는 전문·기술 노동자의 유입은 답보 상태(1995년 약 6만명 → 2006년 11만명)
- 2030년까지 노동력 감소분에 해당하는 1,70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실현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정책당국마저 미온적 태도

□ FDI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보호주의와 배타주의 등의 이유로 경쟁국에 비해 크게 저조

- 누적 FDI 규모가 2001년 6.6조엔에서 2007년 15.4조엔으로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중(3.0%)은 선진국의 1/10 수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일본의 재정운영 실패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제1의 교훈은 재정지출의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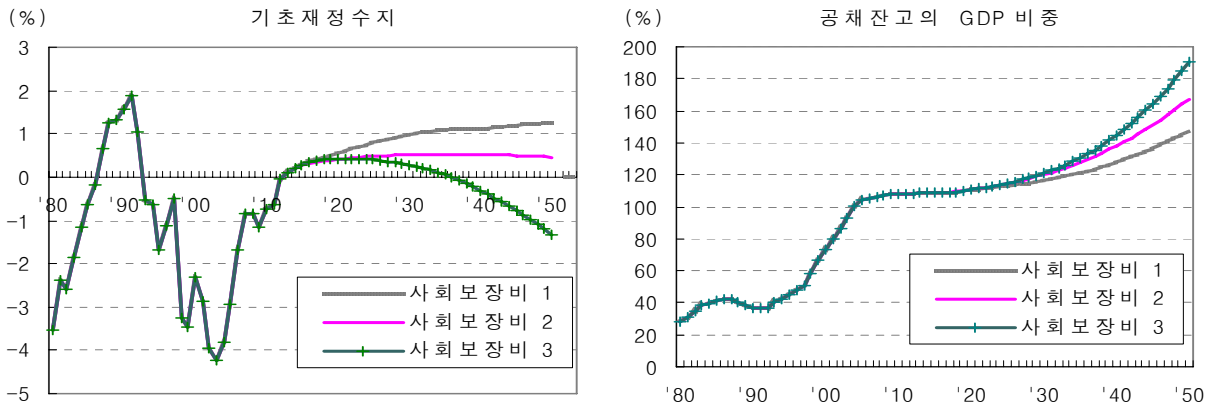
- 2006년 한국의 국가채무잔고의 GDP 비율은 27.7%로서 OECD 국가 평균(77.1%)을 크게 하회할 정도로 낮지만 증가속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
- 한국의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1997~2006년간 연평균 21.1% 증가
-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 보건, 복지 등 사회보장 관련지출이 확대됨으로써 재정지출이 팽창할 수밖에 없는 여건

-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005년 11.0%에서 2023년 20.3%로 증가
-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제지출과 사회보장지출의 급팽창을 제어
-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여 세수기반을 확충
 - 첨단지식산업, 소재·에너지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
 - 재정지출 감축만으로는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기조 하에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여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 성장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운영
- '안팎으로 열린 국가'를 지향하면서 해외시장과 자원을 국내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
 - 해외시장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FDI를 확대
 -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외국인 인력에 대해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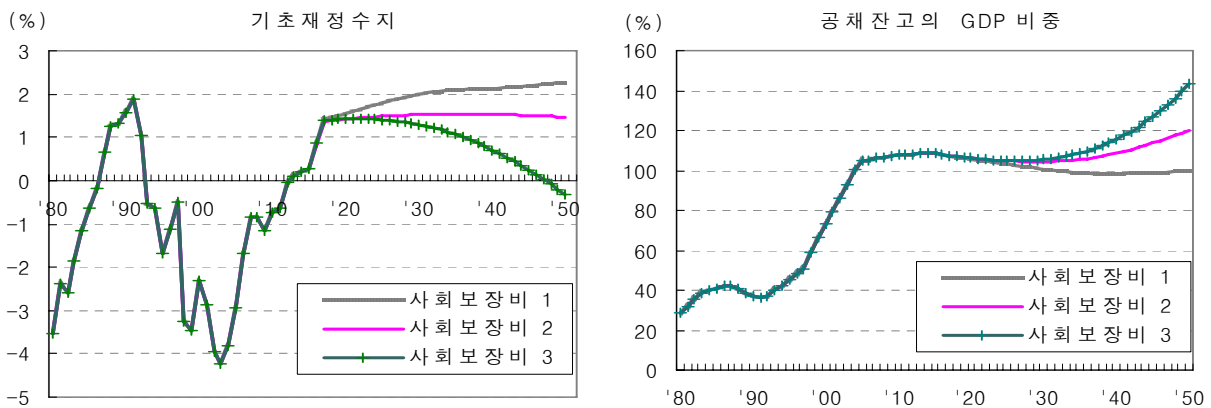
[부록] 시나리오별 기초재정수지 및 공채잔고의 GDP 비중 추이

□ 18가지 시나리오 분석: 잠재성장률 3가지(Base Line, 0.3%p 증가, 0.3%p 하락)×소비세율 2가지(2016년 추가 인상 유무)×사회보장비 지출 3가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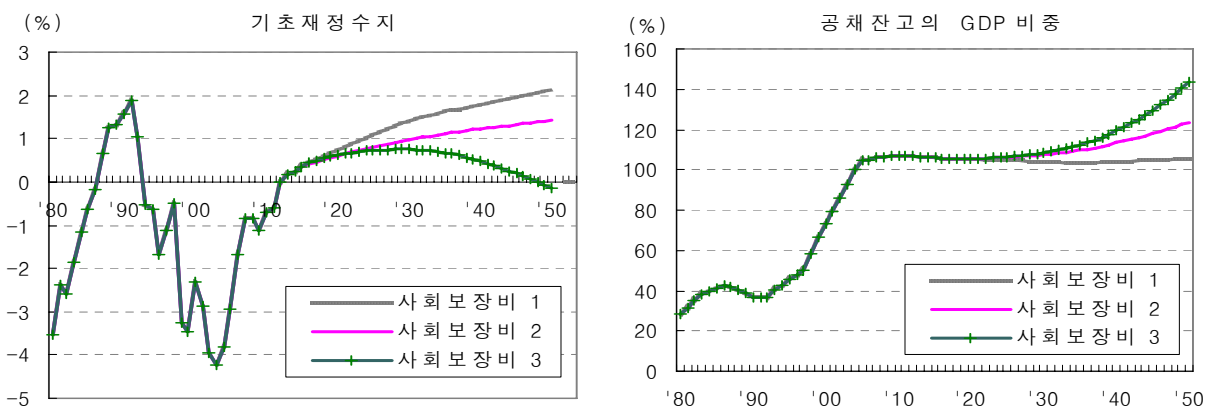
<시나리오 1,2,3: 잠재성장률 Base Line, 2011년 소비세율 인상(5.0%→7.5%) 후 동결>



<시나리오 4,5,6: 잠재성장률 Base Line, 2016년 소비세율 추가 인상(7.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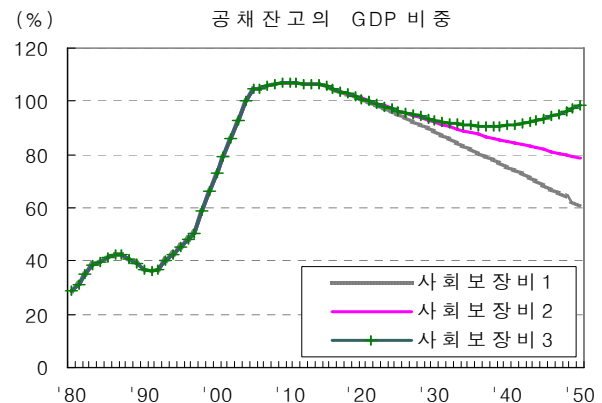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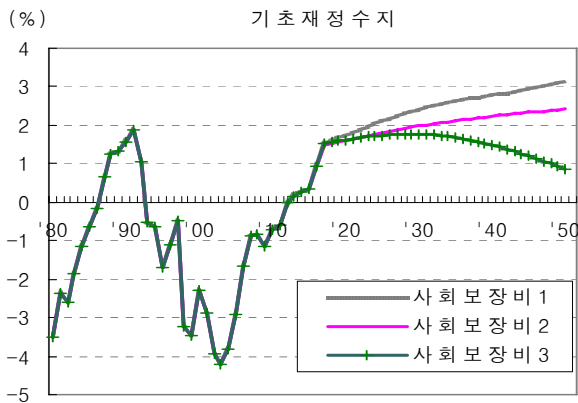


<시나리오 7,8,9: 잠재성장률 0.3%p 증가, 2011년 소비세율 인상(5.0%→7.5%) 후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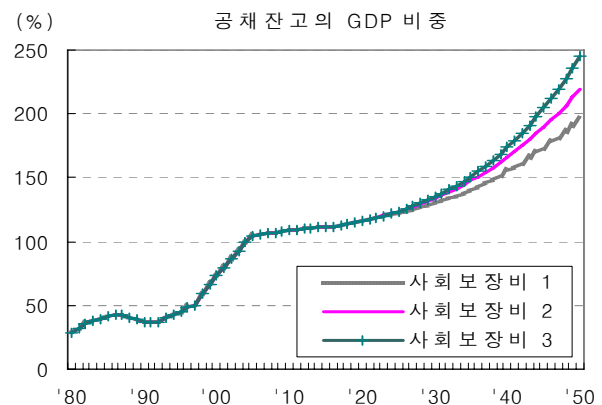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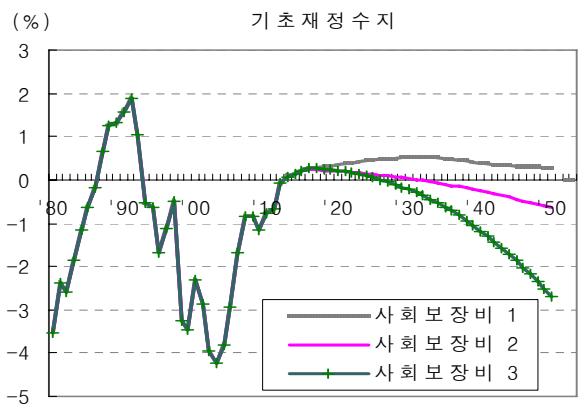


<4>사회보장비 지출은 추계 시 사용한 기준 변수로서, ① 고령화율, ② GDP 증감률, ③ 추세선 3가지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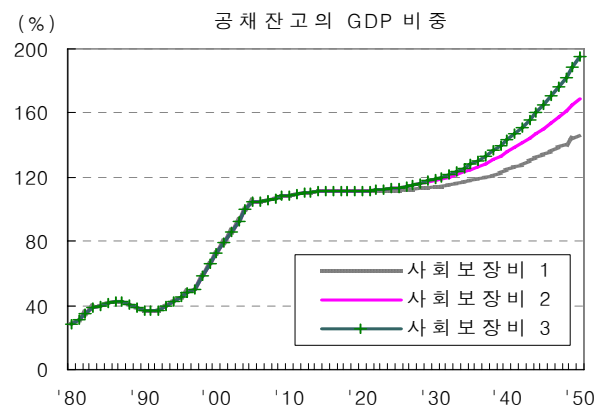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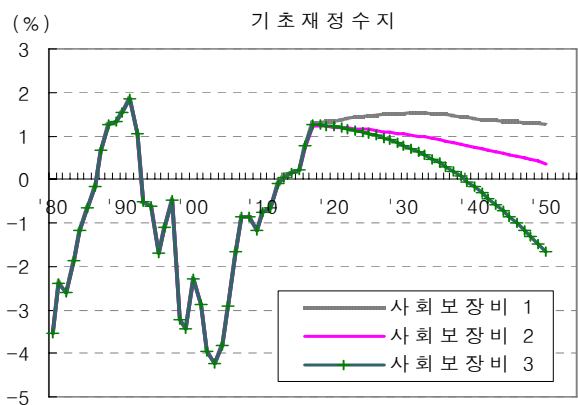
<시나리오 10,11,12: 잠재성장률 0.3%p 증가, 2016년 소비세율 추가 인상(7.5%→10%)>



<시나리오 13,14,15: 잠재성장률 0.3%p 감소, 2011년 소비세율 인상(5.0%→7.5%) 후 동결>



<시나리오 16,17,18: 잠재성장률 0.3%p 감소, 2016년 소비세율 추가 인상(7.5%→10%)>



주: 사회보장비 1, 2, 3은 사회보장비 지출의 변화 추계 기준(고령화율, GDP 증감률, 추세선) 차이에 따른 구분으로, '고령화율'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추세선'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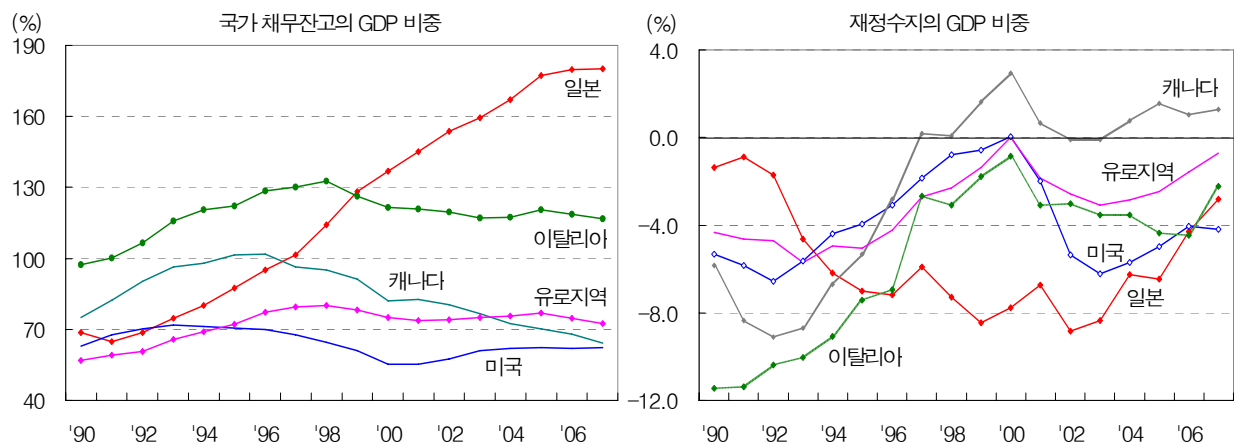
I. 연구 배경 및 목적

미래가 불안한 일본경제

□ 일본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가장 심각

- 2007년 말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잔고는 GDP 대비 180.3%로 OECD 국가 중 최악^{<5>}
- 주요 선진 6개국의 국가채무잔고가 GDP 대비 평균 70~7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국가채무잔고 수준은 심각^{<6>}

국가채무잔고 및 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중 추이



주 1: 재정수지는 SNA 기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로 구성, 단 일본과 미국은 사회보장기금 제외

2: 2007년은 OECD 예상 수치

자료: OECD (2007). *OECD Economic Outlook*, (NO. 82).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도 주요 선진국 중 거의 최악의 수준^{<7>}
- 일본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199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2002년에는 -8.8%까지 확대

<5>OECD (2007). *OECD Economic Outlook*, (NO. 82).

<6>일본에 이어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된 이탈리아의 정부부채잔고의 GDP 대비 비중은 12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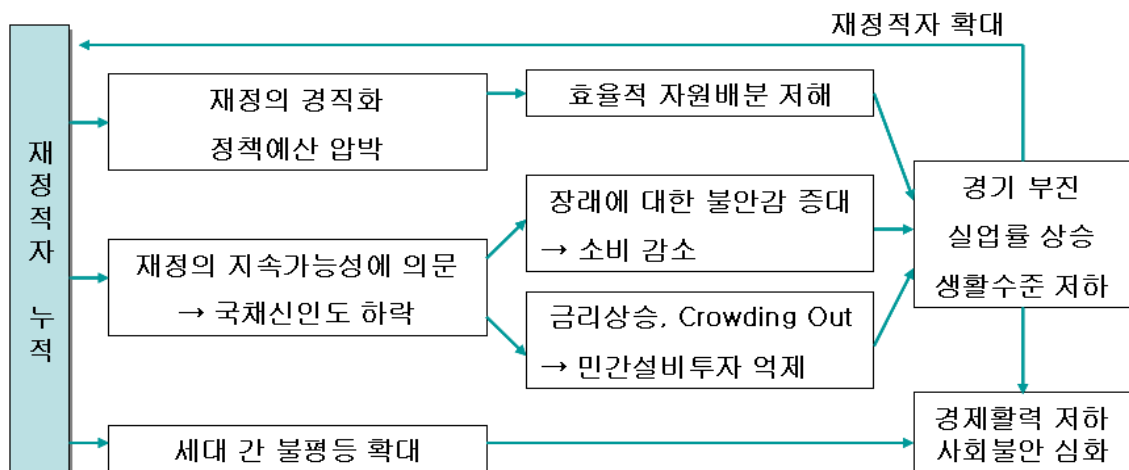
<7>일본과 미국은 修正積立方式의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래 채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할 경우 일본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2007년 기준 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중이 -2.8%에서 -3.4%로 0.6%p 하락)

- 일본의 재정적자 비중은 2003년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으나 2006년 -4.3%로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4.5%)와 비슷한 수준

□ 재정적자 누적은 향후 일본경제 성장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 각국 정책담당자는 재정적자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세대 간 불공평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보유^{<8>}
- 누적 재정적자가 커지면 지급이자 등 채무상환비가 증가하여 정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재정의 경직화를 초래^{<9>}
- 경제침체 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는 등 자원배분 및 경제의 안정화와 관련된 기능에 지장을 초래

재정적자 누적의 문제점



주: Crowding Out(구축효과)이란 국채의 대량 발행으로 인해 금융·자본시장의 자금이 공적부문으로 흡수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현상
 자료: 木下康司 (2006). 『日本の 財政』.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 재정의 지속가능성(정부가 지속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실될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및 소비 위축을 초래

<8>木下康司 (2006). 『日本の 財政』.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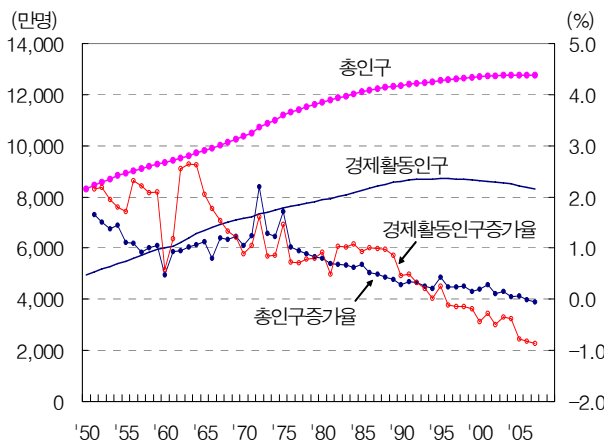
<9>이탈리아에서는 1990년대 전반 GDP 대비 130%의 공적 채무잔고가 누적되어, 이자만 GDP의 약 12%를 지급한 사례도 있음

- 누적 재정적자가 커지면 채무상환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 시중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금리가 상승하고 민간설비투자가 억제
- 동시에 장래 국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져 국채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투자 및 소비 억제를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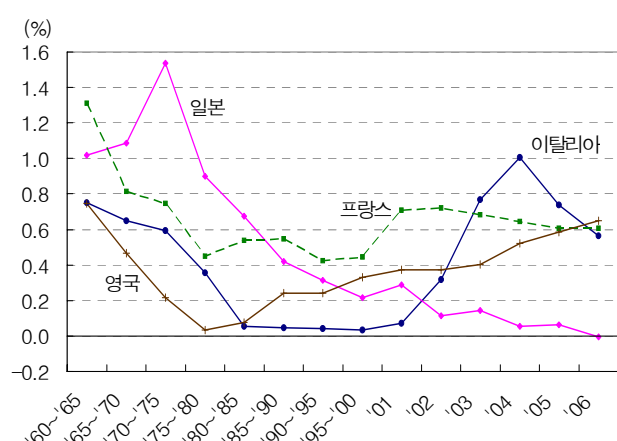
□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으로 인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향후 일본의 경제력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일본은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OECD 국가 중 독일(2003년부터 감소)에 이어 두 번째로 빨리 인구 감소 사회로 진입^{<10>}
-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행속도가 가속될 것으로 추정
- 2002년 시점에서의 추계치에 비해 2006년 추계치가 더 큰 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시사^{<11>}

일본의 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



주요국의 인구증가율 추이 비교



자료: 總務省;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歐洲委員會 등을 참조하여 필자 작성

- 고령화로 인해 연금, 의료, 복지 등 사회보장관련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누적 재정적자의 증가는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

<10>IMF (April 2008). *World Economic Outlook*.

<11>일본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의 2002년 추계에서는 고령화율이 30%가 넘는 시점이 2033년이었으나, 2006년 추계에서는 2023년으로 10년이나 앞당겨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의 경제·재정구조의 미래를 조망하고 그에 대한 일본의 고민을 탐색

- 향후 일본의 인구구조 및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재정구조를 전망하고 그 과정에서 재정구조 건전화의 핵심 요소를 도출
 - 1980~2007년의 실제 데이터 및 선행연구(2008년~2015년 중기 전망)를 토대로 2050년까지 일본의 재정구조를 전망
 - 민감도 분석을 통해 재정구조 건전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탐색
 - 소비세율 인상과 경제성장률·사회보장 관련 재정지출, 금리 등의 변동에 따른 재정구조의 변화를 분석
- 일본이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그 실현 가능성을 점검
 - 일본경제의 성장속도를 추정하여 세계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게 될 위상을 전망
 - 현재의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상, 특히 중국, 인도와의 경제력 격차를 전망
 - 일본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단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미래를 전망
 - FTA,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외국인 유입 등 해외시장과 자원 활용

II. 일본의 재정개혁 목표와 전망

1. 일본의 재정현황과 문제점

1) 일본의 재정현황

일본의 국가총예산 규모는 연간 약 270~290조엔

□ 일본의 국가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만 보면 80~85조엔

-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본 2007년도 일본정부의 예산 규모는 83조엔으로 GDP의 16.1% 수준^{<12>}

□ 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과 특별회계를 합한 실질적인 국가총예산 규모는 270~290조엔으로서 GDP의 약 55~60% 수준

- 국가총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방정부의 예산인 보통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인 세입·세출을 정리하는 회계로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보장, 교육 등 국가의 기본경비를 충당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의 형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정한 회계
- 2007년도 세출 기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방정부의 보통회계를 단순 합계(558조엔)하고 각 예산 간 중복분을 제외하면 266조엔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단순 합계액은 475조엔이나 이중 238조엔은 중복 계산분^{<13>}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 간에도 약 28조엔의 중복 계산분이 존재

<12>명목 GDP는 2007년 12월 말 기준 516조엔

<13>예컨대 특별회계 중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의 예산 179조엔, 교부세·양여세배부특별회계 예산 49조엔이 대표적인 중복분

일본의 국가예산 총액 추이

(조엔)

-		'80	'90	'95	'00	'06	'07
세 입	① 일반회계 예산 총액	43	66	71	85	80	83
	② 특별회계 예산 총액	95	192	267	336	493	389
	③ 정부관계기관 예산액	20	6	8	7	5	3
	④ 소계(①+ ②+ ③)	158	264	346	429	577	475
	⑤ (중복분 차감)	64	123	161	202	286	238
	⑥ 차감 후 순액(④-⑤)	94	140	185	227	292	237
	⑦ 지방정부 예산	42	67	83	89	83	83
	⑧ 소계(⑥+ ⑦)	136	207	267	316	375	320
	⑨ (중복분 차감)	20	28	32	37	32	28
	⑩ 세입 純計(⑧-⑨)	116	179	235	279	343	293
세 출	① 일반회계 예산 총액	43	66	71	85	80	83
	② 특별회계 예산 총액	90	175	242	319	460	362
	③ 정부관계기관 예산액	20	6	8	8	4	2
	④ 소계(①+ ②+ ③)	153	247	321	411	544	447
	⑤ (중복분 차감)	64	125	160	200	284	236
	⑥ 차감 후 순액(④-⑤)	89	123	161	211	260	211
	⑦ 지방정부 예산	42	67	83	89	83	83
	⑧ 소계(⑥+ ⑦)	130	190	243	300	344	294
	⑨ (중복분 차감)	20	28	32	37	32	28
	⑩ 세출 純計(⑧-⑨)	111	162	211	263	312	266

주 1: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것은 다음 회계년도의 국채상환에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환채 발행분과 사업운용 수입 및 차입이자 등의 차이에 기인

2: 중복액은 일반회계-특별회계 간, 특별회계 상호 간, 특별회계 계정 간 이월·편입관계 외에도, 재정투융자 자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의 수취·지급분 등이 있음

3: 수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끝자리의 합계(또는 차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財務省, 『"財政金融統計月報"』, 각호.

□ 이들 예산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계정 간 중복이 많아 정확한 실체 파악은 매우 어려운 실정

- 재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정부 내부의 자금이동, 지방공공단체 간 신용공여·변제에 관한 회계제도 등에서도 정합성이 결여
- 주로 다양하고 복잡한 특별회계 계정 때문에 발생

- 이 때문에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상당수의 특별회계 제정이 통폐합되기도 하였음

특별회계의 수, 종류 및 구성 변화 내용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특별회계 수	38	37	37	32	31	31	31	28
분야	특별회계 명칭 및 통폐합·폐지 내용							
사업회계	국유임야사업회계, 국영토지개발사업회계, 도로정비회계, 치수회계, 항만정비회계, 공항정비회계 등 6개(종전 알콜전매사업회계는 2001년 이후 폐지되고, 우정사업회계, 우편저금회계, 조폐국회계, 인쇄국회계 등 4개 회계는 2003년 이후 폐지)							
보험회계	지진재보험회계, 연금특별회계(2007년 국민연금회계, 후생보험회계를 통합), 선원보험회계, 노동보험회계, 농업공제再보험회계, 삼림보험회계, 어선재보험·어업공제보험회계, 무역재보험회계, 자동차손해배상책임再보험회계 등 9개(종전 간이생명보험회계는 2003년 이후 폐지)							
관리회계	등기회계, 외환자금회계, 국립高度전문의료센터회계, 식량안정공급특별회계(2007년 식량관리회계와 농업경영기반강화조치회계를 통합), 특허회계, 자동차검사등록회계 등 6개(종전 국립학교회계는 2004년 이후 폐지)							
융자회계	재정투융자자금회계(2000년 이전 명칭은 자금운용부회계), 산업투자회계, 도시개발자금융통회계 등 3개							
정리회계	교부세·양여세배부회계, 국채정리기금회계, 에너지대책특별회계(2007년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회계와 電源개발촉진대책회계를 통합), 특정국유재산정비회계 등 4개							

자료: 財務省, 『財政金融統計月報』의 계정 이력을 토대로 필자 정리

- 이로 인해 외부에서 각 예산 수치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14>}

적자가 반복되는 재정구조

□ 정부 예산의 조달 및 운용에서 공채^{<15>}가 차지하는 비중이 25~30%

<14>본고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분석

<15>국가나 지방정부가 세출 재원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일본의 재정통계상 국채 중 재정투융자채나 교부국채를 제외한 보통국채만 지칭)

- 일반회계 세입 중 약 30%를 공채발행으로 조달
 - 2007년도 세입에서 공채발행으로 조달하는 금액 비중이 30.7%
 - 일반회계 세입 중 정부가 마땅히 조달해야 할 재원인 稅收(약 53조엔)가 차지하는 비중은 65% 수준에 불과
- 세출의 약 25%를 국채비(국채·차입금 상환 및 이자 지급)로 지출
 - 여기에 지방정부로 배분해주어야 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하면 정부가 정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세출은 약 47조엔(세출의 57%)에 불과

일본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구조(2007년도 기준)

(10억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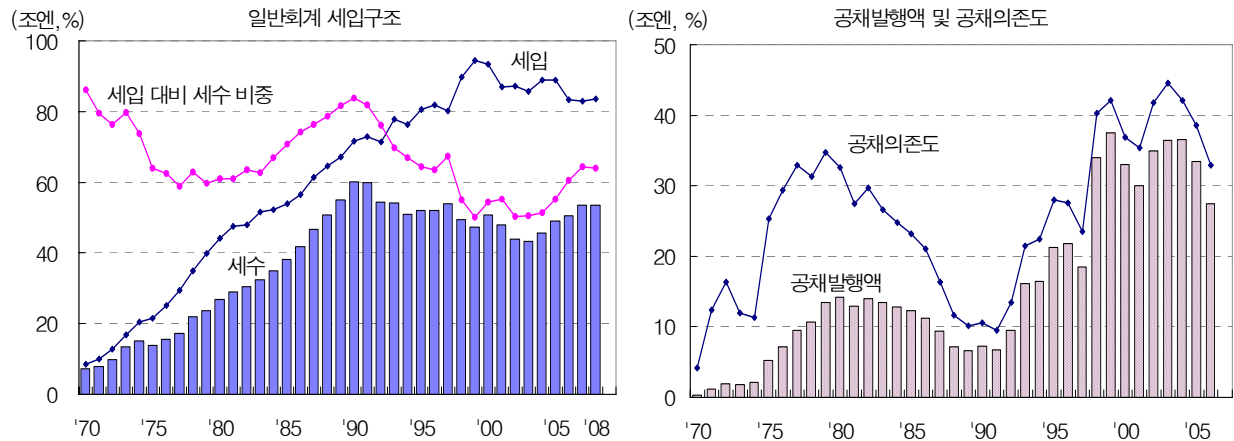
세출구조				세입구조		
	비목	금액	비중	비목	금액	비중
일반세출	사회보장	21,141	25.5	조세·인지세	53,467	64.5
	공공사업	6,947	8.4	(소득세)	(16,545)	(20.0)
	교육·과학	5,274	6.4	(법인세)	(16,359)	(19.7)
	방위	4,802	5.8	(소비세)	(10,645)	(12.8)
	기타	8,814	10.6	(기타)	(9,918)	(12.0)
	지방교부세교부금	14,932	18.0	기타수입	4,010	4.8
	국채비	20,999	25.3	공채발행수입	25,432	30.7
	세출합계	82,909	100.0	세입합계	82,909	100.0

자료: 財務省 (2008). 『日本の財政を 생각한다 - 平成 20年 6月』. <<http://www.mof.go.jp/jouhou/syukei/sy014.htm>>

□ 세입-세출 간 구조적 적자 문제로 인해 국가채무잔고가 급증

- 재정적자를 공채발행으로 해결하는 패턴을 반복
 - 1970년대 국토개발에 따른 대규모 공사 등으로 인해 공채발행이 늘어나면서 1979년 정부예산의 공채의존도^{<16>}가 34.7%로 증가
 - 1980년대 들어 정부의 재정재건 노력과 버블기 세수 확대 등에 힘입어 공채발행액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버블 붕괴 후 재차 큰 폭으로 증가
- <16>일반회계 세입에서 국공채발행액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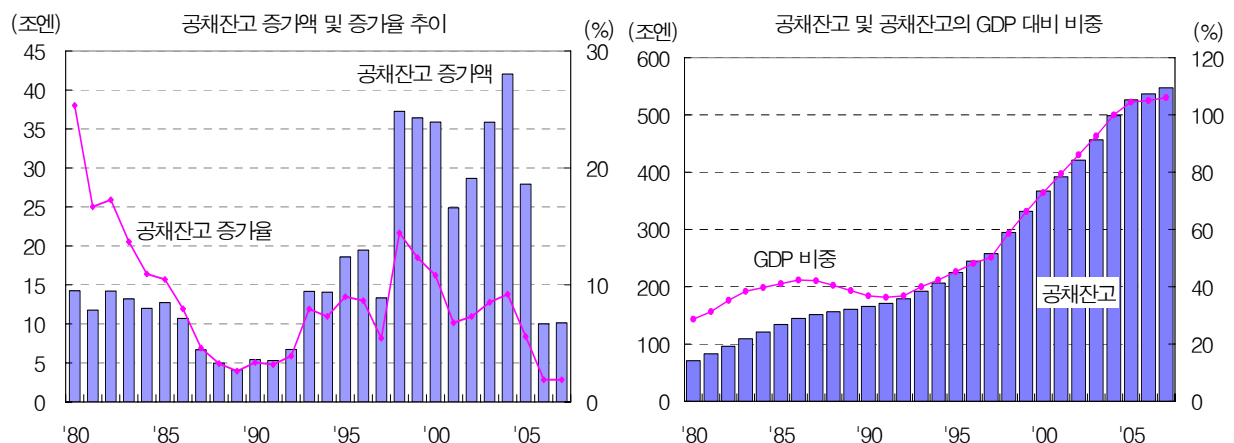
일본의 일반회계 세입구조 및 공채발행액 추이



자료: 財務省 (2008). 『日本の 財政을 생각한다 - 平成 20年 6月』. <<http://www.mof.go.jp/jouhou/syukei/sy014.htm>>

- 1990년대 이후 공채발행액이 늘어나면서 공채잔고도 1991년 172조엔에서 2007년에는 547조엔으로 증가
- 이 때문에 1991년도만 하더라도 GDP 대비 36.3%였던 공채잔고 비중이 2007년도에는 106.1%로 증가

공채잔고 추이



주: 회계년도 기준(단 2007년도 국가채무잔고는 2008년 1월 기준)

자료: 財務省, "國債 및 借入金 殘高"; 內閣府, "四半期別GDP速報"; 日本銀行, "資金循環"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2) 일본 재정악화의 배경 및 원인

장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이 주된 원인

□ 버블 붕괴 후 일본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공사를 벌임으로써 공공사업비 예산이 크게 증가

- 일본정부는 버블 붕괴 이후 1992~2000년간 9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124조엔에 달하는 추가 재정을 동원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경기부양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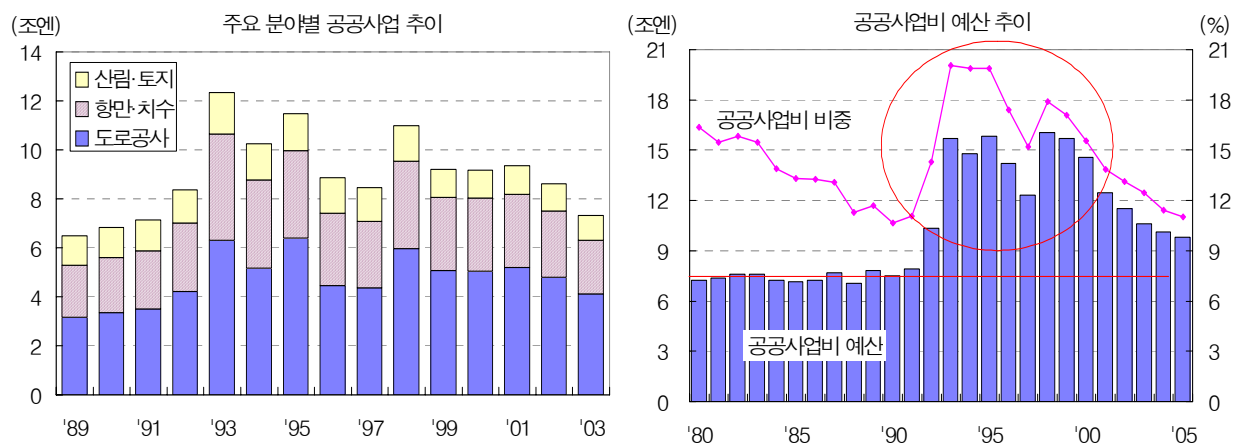
(조엔)

실시시기	'92.8	'93.4	'93.9	'94.2	'95.9	'98.4	'98.11	'99.11	'00.10
내각명	미야자와	미야자와	호소카와	호소카와	무라야마	하시모토	오부치	오부치	모리
경제대책명	종합경제대책	新종합경제대책	긴급경제대책	종합경제대책	경제대책	종합경제대책	긴급경제대책	경제신생대책	新발전정책
재정규모	10.7	13.2	8.0	15.3	14.2	16.7	17.0	17.9	11.0

자료: 內閣府, "經濟財政政策".

- 경기부양책으로 투입한 특별재정지출의 대부분은 공공사업에 투입

공공사업 투자 현황



자료: 財務省, 『財政金融統計月報』, 각호.

- 1992년 이후 공공사업비 관련 예산이 급증한 것도 바로 이 때문
- 버블 붕괴 이후 1994년, 1998년, 1999년 3번에 걸쳐 감세 위주의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단행
- 1994년에는 1994~1996년 3년에 걸쳐 소득세에 대한 특별감세정책을 추진한 데 이어, 소득세의 각종 공제를 확대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추진
- 1998년에는 1997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3%에서 5%로 인상)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인세개혁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을 실시
 -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소득세 특별감세를 실시
- 1999년에는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17>}와 정률감세^{<18>}에 이어 법인세율의 기본세율도 인하
 - 법인세 기본세율이 종전 34.5%에서 30.0%로 인하

일본의 법인세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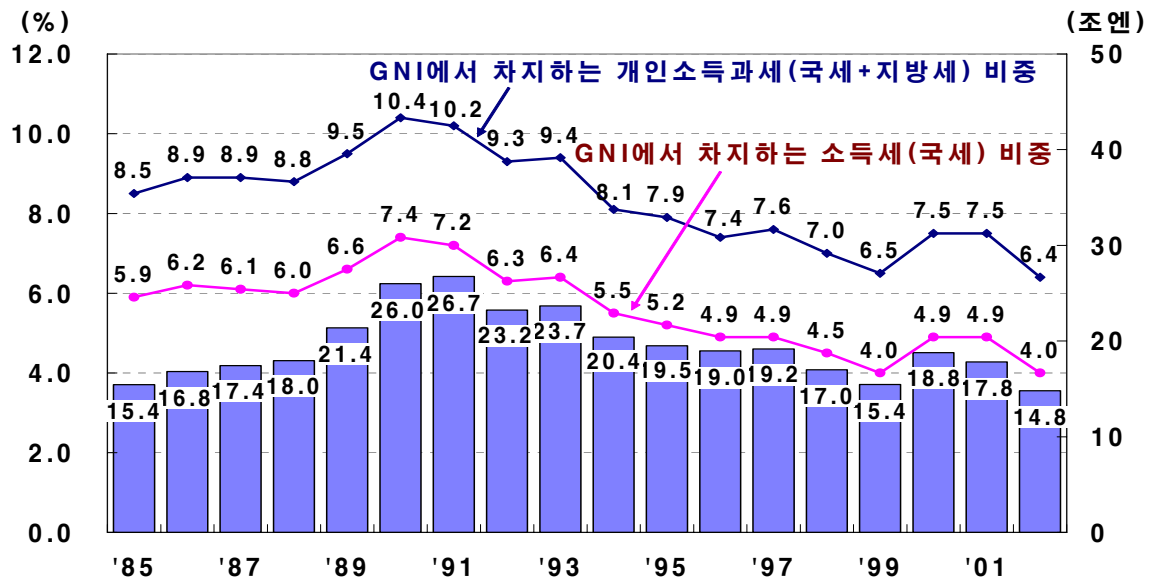
-	1990년 이후	1998년 이후	1999년 이후
법인세율(중소기업)	37.5 (28.0)	34.5 (25.0)	30.0 (22.0)
사업세율	12.0	11.0	9.6
주민세율	법인세액×17.5%		
법인기업의 실효세율	49.98	46.36	40.87

주: 실효세율은 법인사업세의 손금산입조정후 법인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를 합한 세율

- 이중 소득세만 보면 1994년 이후 2002년까지 약 44조엔의 감세가 단행
 - 1994년 특별감세 조치로 1994~1996년간 누계 7.8조엔 감면
- <17>1980년대 초반 일본의 소득세율의 누진구조는 10~75%의 19단계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최고세율 인하 및 누진구조 간소화가 진행되어 1989년에는 10~50%의 5단계, 1999년에는 10~37%의 4단계의 누진세율구조로 간소화(2007년에는 5~40%의 6단계 누진세율구조로 변경)
- <18>정률감세(연간 일인당 최대 29만엔) 조치는 2006~2007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사실상 증세 조치)

- 1994년 11월 세제개혁으로 매년 2.4조엔 규모의 세 부담 경감
- 1998년 특별감세 조치로 2.8조엔 감액
- 1999년 정률감세 등 세제 개혁으로 매년 3조엔 규모의 감세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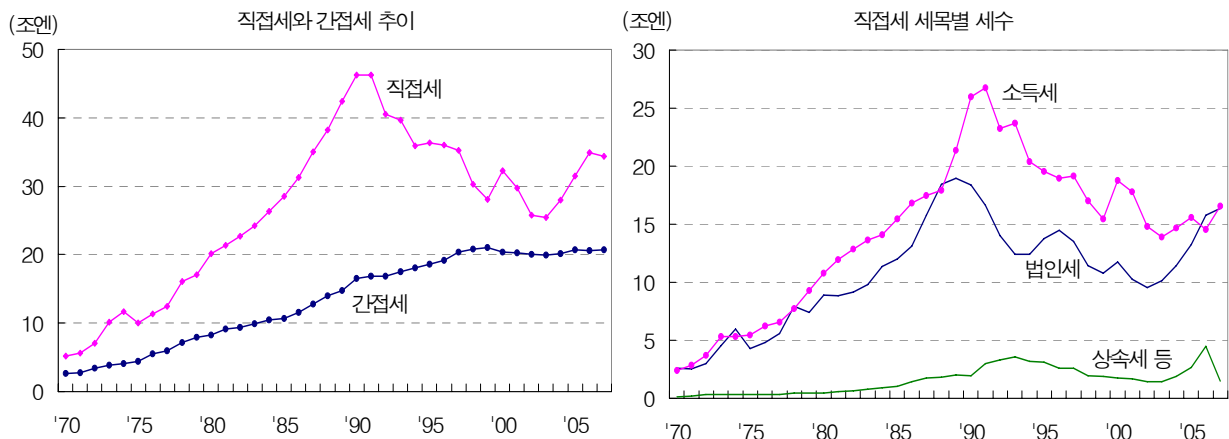
소득세수의 추이



자료: 財務省, 『"財政金融統計月報』, 각호; 內閣府, "國民經濟計算"

- 여기에 지가 및 주가 하락과 기업활동 위축 등에 따른 영향까지 가세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 수입이 크게 감소

일본의 세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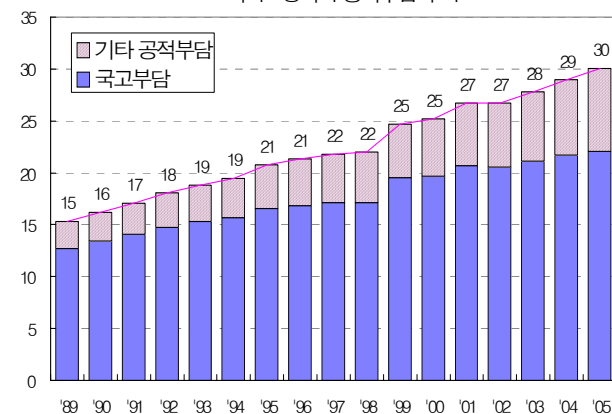
자료: 財務省, 『"財政金融統計月報』, 각호.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지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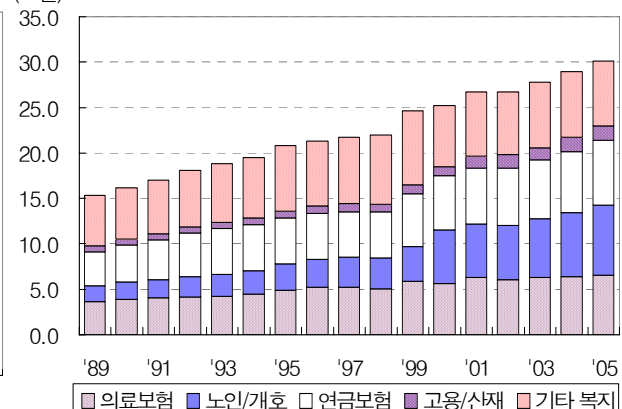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가 재정악화를 가속

- 사회보장비 관련 공적지출이 빠르게 증가
 - 1990년 16조엔이었던 사회보장비 관련 공적부담이 2005년에는 30조엔으로 약 2배 규모로 확대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관련 사회보장비지출이 크게 증가
 - 노인건강, 개호보험과 관련한 공적부담이 1990년 1.9조엔에서 2005년 7.7조엔으로 15년간 연평균 6.0%씩 증가
 - 2000년부터 실시된 개호보험에 대한 정부보조가 고령화 관련 공적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의 하나로 작용^{<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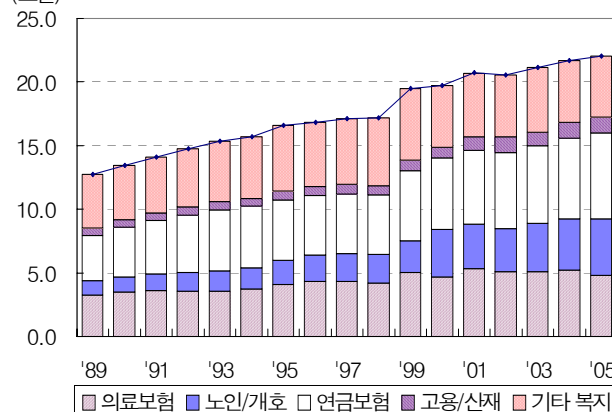
(조엔) 사회보장비의 공적부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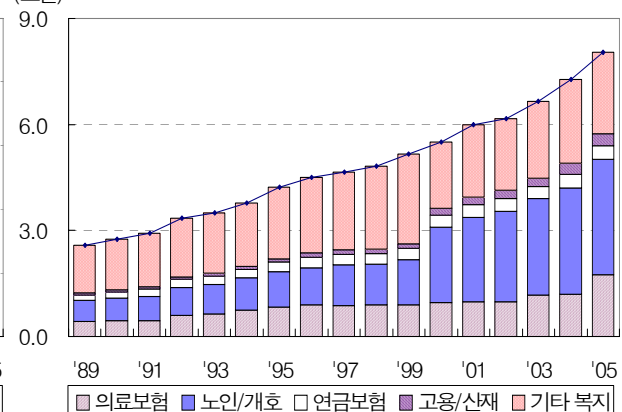
(조엔) 사회보장비의 항목별 공적부담 추이



(조엔) 항목별 국고부담 추이



(조엔) 항목별 기타 공적부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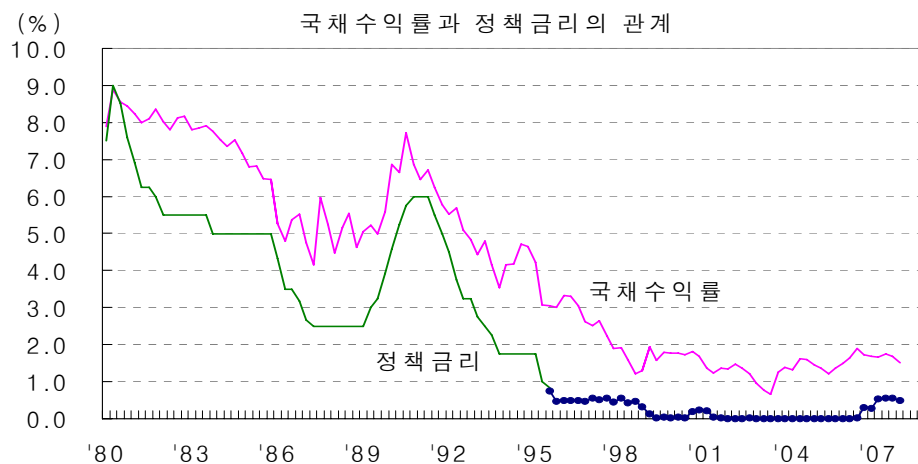


자료: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7). 『"社會保障費統計資料集-平成19年度遡及版』.
 <19>개호보험 관련 정부의 공적부담은 2000년 2.5조엔에서 2005년 3.2조엔으로 증가

- 그 결과 정부 일반회계 세출에서 사회보장 관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16.5%에서 2007년 25.5%로 증가^{<20>}

적자재정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위기의식 결여

- 국가채무잔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은 오히려 경감되는 현상이 장기 지속
- 일본정부는 버블 붕괴 이후 종전 6%(공정할인율)였던 정책금리^{<21>}를 지속적으로 내리기 시작하여 1995년 9월에는 0.5%까지 인하
 - 1999년 2월부터 사실상 제로금리정책을 실시^{<22>}
 - 이후 제로금리정책은 2000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일시 해제된 기간을 제외하면 2006년 6월까지 실시
- 이 때문에 90년 7% 수준이었던 국채수익률(10년 만기 신규발행 국채 기준)도 97년 4/4분기 이후 2% 미만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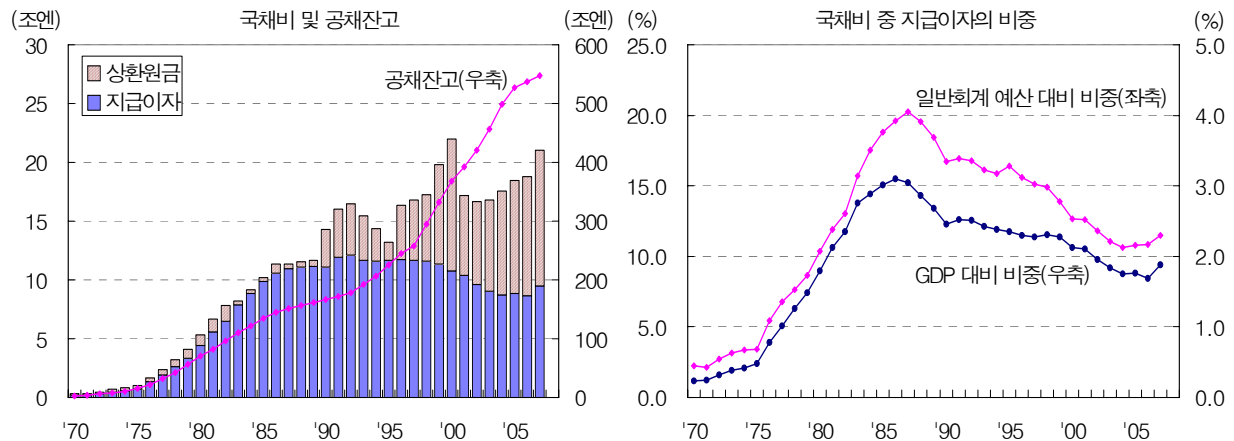


자료: 日本銀行, 『金融經濟統計月報』, 각호

- <20>일반회계 세출 중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같은 기간 11.6조엔에서 21.1조엔으로 증가
- <21>1994년 9월까지 일본의 정책금리는 공정할인율(당시 민간은행의 금리는 공정할인율과 연동)이었으나, 1994년 10월 민간은행의 금리가 완전 自由化되었기 때문에 공정할인율은 정책금리로서의 기능을 상실. 대신 일본중앙은행은 콜 금리를 통해 단기금융시장의 금리를 조작하여 금융정책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일본의 정책금리는 콜 금리
- <22>1999년 2월 일본중앙은행은 정책금리(콜 금리)를 0.15%로 낮추었는데, 이는 중개수수료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로금리를 의미

- 그 결과 공채잔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자는 오히려 감소
- 국채비 중 지급이자가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7%에서 2006년 10.9%까지 낮아졌고,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2.5%에서 1.7%로 하락

국채비 추이



자료: 財務省 (2008). 『日本の財政を 생각한다 - 平成 20年 6月』. <<http://www.mof.go.jp/jouhou/syukei/sy014.htm>> ; 財務省, 『財政金融統計月報』, 각호.

□ 국채 소화능력이 국가채무잔고 누적에 대한 일본정부나 국민들의 우려를 희석

-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안전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자산의 성격으로 인식
- 그간 일본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은 유력 투자처가 없어 국채를 안정자산으로 선호
- 일반국민도 시중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채 매수에 가담
- 이 때문에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발행한 국채를 소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은 전무
- 일본정부는 국채만기가 도래하면 차환발행하여 기존 국채를 상환하고, 달리 유망한 자금 운용처가 없는 금융기관이나 국민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차환발행 국채)를 사는 구조를 반복

□ 일본 국채의 보유구조도 정부부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데 일조

- 일본 국채(재정투융자채 포함)는 일본국민이 90% 이상 보유
 - 일본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중앙은행, 기타 공적 금융기관의 보유비율이 20%를 초과^{<23>}
 - 해외투자자나 일본 내 외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2007년 기준 8.1%에 불과

일본 국채의 보유주체별 비중(연말 기준)

(%, 조엔)

연도	정부 및 공적 기관				국내 금융기관	가계 기타	해외, 외국은행	합계 (금액)
	정부	중앙은행	공기업	소계				
'80	9.9	14.1	18.0	42.0	46.2	10.0	1.8	64
'85	3.2	8.7	26.1	38.0	50.4	9.9	1.7	145
'90	3.5	7.1	32.3	42.9	46.2	7.4	3.5	156
'95	4.0	11.3	23.1	38.4	51.5	5.5	4.6	241
'00	3.0	11.7	19.8	34.5	53.1	4.3	8.1	409
'01	6.0	14.9	15.3	36.2	54.9	4.2	4.7	469
'02	6.9	15.1	12.7	34.6	57.2	3.9	4.3	539
'03	8.3	14.8	9.8	32.9	59.0	3.7	4.4	570
'04	9.3	14.3	7.7	31.4	58.8	4.8	5.0	642
'05	10.3	13.0	6.1	29.4	59.2	5.9	5.5	667
'06	10.7	10.5	3.8	25.0	60.8	7.0	7.2	673
'07	11.3	9.5	2.7	23.5	60.9	7.4	8.1	684

주1: 국채 및 재정투융자채 기준

2: 공적 금융기관에는 재정투융자자금, 공적 연금, 우편저축(2006년까지) 등이 포함

자료: 日本銀行, 資金循環 통계 DB.

- 구미 선진국과 국채의 외국인 보유비율을 비교할 때 일본은 현저히 낮은 상태

<23>공적 금융기관의 보유비율이 2006년 34.1%에서 2007년 13.5%로 급감한 것은 우정성 민영화로 인해 2007년 10월부터 우편저축 부문이 유초(郵貯)은행으로 분리되어 민간금융기관으로 전환되었기 때문

국채의 소유자별 보유잔고 비교

(%)

-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해외	개인·기타	합계
일본	40.3	14.7	37.7	3.3	3.9	575조 9,771억 엔
미국 1	14.5	16.3	16.5	39.9	12.8	4조 1,438억 달러
2	49.1	9.5	9.9	23.9	7.6	7조 1,311억 달러
영국	4.0	5.5	68.6	12.2	0.1	2,788억 파운드
독일	0.0	0.3	38.6	40.3	20.7	1조 3,578억 유로
프랑스	0.3	0.0	68.0	26.2	2.5	1조 4,479억 유로

주: '미국 1'은 비시장성 국채 제외, '미국 2'는 비시장성 국채 포함

자료: 財務省 (2004). "國債管理政策の 現状과 今後展望". (일본, 자금순환통계(BOJ) ; 미국, Flow of Funds Account for the United States(FRB) & Treasury Bulletin(MOF) ; 영국, BoE Quarterly Bulletin, Bank Return(BoE) ; 독일,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 프랑스, Financial Accopunt(Banque de France)에서 재인용)

- 이 때문에 과거 중남미 국가들이나 동구권 제국과는 달리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미

일본의 국채 보유구조와 미래 세대 부담과의 관계

- 일반적으로 국가의 현재 채무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일본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구조
 - 왜냐하면 국채 대부분이 일본 국내에서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부채만큼 현재 금융자산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
 - 정부가 세금을 늘려 국채를 상환할 경우, 상환자금은 결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로 환원되는 구조

□ 그 결과 과거 수차례나 반복된 재정개혁이 사실상 구호성정책으로 끝나는 결과를 반복

- 1997년 11월 급격히 악화되는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구조개혁법'을 만들고, 재정구조개혁 목표도 설정
- 1998년 예산편성 시 각 세출 분야마다 양적 감축목표(공공투자지출 전년

대비 7% 감축 등)를 설정하고, 2003년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를 합한 재정적자 규모를 GDP 비중 3% 이하로 줄인다는 것이 개혁의 주요 내용

- 하지만 실제 재정운용에서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팽창 예산으로 전환
 - 1998년도 당초 예산은 '제정구조개혁법'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경기가 악화되자 다양한 예외조항을 만들어 예산을 증액^{<24>}
-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긴축예산, 공채발행 축소 등을 시도했으나, 2005년까지 공채발행 규모는 30조엔을 초과
 -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공채발행액 30조엔 이하'를 목표로 하는 세출계획을 수립했으나, 보정예산에서는 오히려 34조 9,680억엔으로 증액

□ 재정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태로 발전

- 2007년 말 기준 일반회계의 누적 재정적자인 공채잔고가 GDP의 106.1%, 국가채무잔고(재무성 통계 기준)는 838조엔, GDP의 162.5%^{<25>}
- 향후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고 그에 따른 저축률 하락과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경우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26>}이 농후
- 이 때문에 고이즈미(小泉 純一郎) 정권에 이은 아베(安倍 晋三)) 정권과 후쿠다(福田 康夫) 정권에서는 재정개혁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국민정서를 결집시키려 안간힘

<24>1998년도 공채발행 예산은 당초 15조 5,570억엔이었으나 3차례의 예산 보정 후에 34조엔으로 늘었고, 이듬해 1999년도에도 공채발행 예산을 31조엔으로 늘렸음

<25>2007년말 기준 일본의 '국채 및 차입금잔고'는 보통국채 535조엔, 재정투융자채 141조엔, 기타 국채 3조엔, 차입금 57조엔, 정부단기증권 102조엔 등 합계 838조엔이며, 이중 보통국채가 공채잔고에 해당. 여기에다 지방정부의 채무잔고 약 165조엔(총액 199조엔에서 중앙·지방 중복분 34조엔 차감)까지 합할 경우 국가 총채무잔고는 1천조엔을 초과

<26>다만 현 상태로 가더라도 당분간은 낮은 금리가 유지됨으로 인해 재정문제가 갑작스레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

2. 재정개혁의 목표와 성과 평가

1) 재정개혁의 기본 전략

재정개혁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선택

□ 고이즈미 정권은 '구조개혁 없이 경제성장 없다'는 슬로건 하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재정개혁에 대한 토대를 마련

- 고이즈미 정권(2001년 4월~2006년 9월)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1%에서 2% 대로 올리는 데 성공
-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진작보다는 정부규제 완화, 민영화 등으로 민간활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일본경제를 '10년 불황'에서 탈출시키는 데 성공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재정 목표

-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2002~2003년 2년간은 집중 조정기간으로 낮은 성장이 예상되나 그 후에는 실질 1.5%(명목 2.5%) 수준의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을 통해 중앙 및 지방의 GDP 대비 재정적자(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의 저하도 예상
-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2010년까지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0.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중앙 및 지방의 GDP 대비 재정적자(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경제성장의 성과를 재정개혁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실패
- GDP 대비 정부의 누적 채무잔고가 고이즈미 정권 기간(2001년 4월 ~2006년 9월의 5년 반)동안 지속적으로 증가^{<27>}

<27>2001년 3월 538조엔이었던 국가채무잔고가 2006년 9월에는 823조엔으로 증가했고 GDP 대비

□ 2006년부터 본격적인 재정개혁 작업에 착수

- 고이즈미 집권기인 2006년 7월, 경제성장과 동시에 재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목표수치를 제시한 「기본방침 2006」^{<28>}을 채택
- '일본경제 새로운 도전의 10년'을 위한 3개의 정책과제로서, ① 경제 성장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② 재정건전화, ③ 안전·안심하고 유연하면서도 다양성이 넘치는 사회 실현을 제시
- 특히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는 '2001년도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합한 국가 전체의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흑자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29>}
- 이어 집권한 아베 총리(2006년 10월~2007년 9월)는 '경제성장 없이 재정개혁 없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① 경제성장과 ② 재정개혁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을 표방
- 기본적인 정책 목표 및 방향은 「기본방침 2006」을 추종
- 후쿠다 정권(2007년 10월 이후)에서도 기본적인 정책 목표 및 방향은 「기본방침 2006」이며 아베 정권의 전략을 추종

고이즈미-아베-후쿠다 정권의 재정재건 전략 흐름

총리	재정재건 전략
고이즈미	- 재정재건의 구체적 목표(2011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제시 - 목표 달성 수단으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제시 · '경제성장 전략 大綱(2006년)'에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향후 10년간 실질 GDP를 연평균 0.4%p 향상을 목표
아베	-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5년간 1.5배로 하는 새로운 목표 제시 · 「骨大 方針 2007」에서 서비스 혁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후 5년간 50% 증가한다는 목표를 제시
후쿠다	- 「기본방침 2006」, 아베 정권의 목표를 승계 · 경제성장과 재정재건 목표를 양립

국가채무잔고의 비율은 같은 기간 106.1%에서 162.9%로 증가

<28>정식 명칭은 '財政經濟運營과 構造改革에 관한 基本方針 2006'

<29>상세 내용은 후술

재정재건 전략은 2단계로 추진

□ 1단계 전략은 '2011년 기초재정수지의 흑자화^{<30>}'를 달성하는 데 초점

- 일본정부는 2006년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 14.4조엔의 적자 상태인 기초재정수지를 2011년에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
- 1차적으로는 소비세율 인상 등의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세출 삭감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산
- 이를 위해 2011년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세출보다 11.4~14.3조엔을 삭감한다는 방침

재정개혁의 수치 목표

(조엔)

-	2002	2006	2011년			비고
			未개혁	목표(개혁)	삭감액	
사회보장	30.1	31.1	39.9	38.3	1.6	· 공공사업관계비 1~3% 삭감 · 지방단위사업(투자적 경비) 1~3% 삭감 · 과학기술진흥비 1.1% 증액 · ODA 2~4% 삭감
인건비	31.2	30.1	35.0	32.4	2.6	
공공투자	24.7	18.8	21.7	16.1~17.8	3.9~5.6	
기타	27.8	27.3	31.6	27.1~28.3	3.3~4.5	
세출 합계 (세수 등)	113.6 85.7	107.3 82.8	128.2 111.7	113.9~116.8 111.7	11.4~14.3 -	
기초재정 수지	-27.8	-14.4	-16.5	-2.2~-5.1	-	

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계 기준(SNA 기준)

자료: 内閣府, 「基本方針 2006」; 内閣府, 2006년 7월 7일 閣議決定 등

□ 2단계는 2010년대 후반까지 국가채무잔고의 GDP 대비 비중을 안정적으로 인하하는 전략을 추진

<30>이는 과거 채무인 누적공채에 대한 원리금을 뺀 세출을 그 해의 세수 등(공채발행분 제외)으로 조달하는 것으로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첫 단계

- 기초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더라도 공채이자 부분이 재정적자가 되고 그만큼 공채잔고가 증가(공채잔고 순증가액=공채발행액-상환액)
- 명목성장률이 국채이자율보다 높으면 GDP 대비 공채잔고의 비중은 안정적으로 하락하지만 국채이자율이 더 높으면 GDP 대비 비중은 증가^{<31>}
- 따라서 2011년 이후 장기금리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거나, 경제성장률과의 격차 이상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전략

□ 개혁원칙 또는 추진방향으로 7가지를 제시

- 원칙 1: 세출 삭감, 정부자산 매각, 특별회계 개혁 등 철저한 '정부조직 슬림화'로 국민부담 증가(증세)를 최소화
- 원칙 2: 잠재성장력 강화를 통해 실질성장력 향상을 도모
- 원칙 3: 특별회계, 독립행정법인도 예외없이 세출 삭감 및 합리화 대상에 포함시켜 명확한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성역없는 세출 삭감을 단행
- 원칙 4: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
- 원칙 5: 사회보장 급부 효율화,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 제고에 대비한 안전 財源 확보 등으로 차세대에 부담을 미루지 않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 원칙 6: 부채와 직접 연결된 자산 매각 분은 부채 상환에 충당하는 등 과감한 자산압축(Balance Sheet 압축)을 통해 부채를 감축
- 원칙 7: 새로운 국민부담은 官 비대화에 충당하지 않고 국민에게 환원
 - 중앙·지방 양측에서 철저한 세출 삭감을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입 증가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환원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

<31>채무잔고의 GDP 비중 = {전기 말 채무잔고×(1+이자율)}/{전기 GDP×(1+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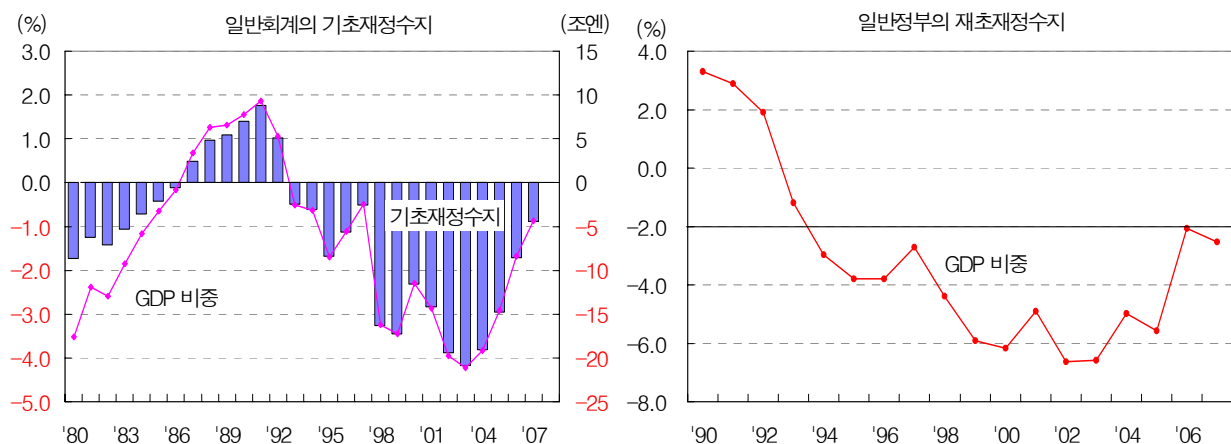
2) 재정개혁 전략에 대한 평가

기초재정수지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개혁의 성과를 획득

□ 재정수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해볼 때 고이즈미 정권 이후 일본의 기초재정수지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기초재정수지의 GDP 비중은 빠르게 개선되어 2003년 -4.2%에서 2007년 현재 -0.9% 수준
- 중앙·지방 정부 및 사회보장기금(공적연금)을 합한 기초재정수지도 2002년 이후 개선되는 추이를 시현(OECD 기준)

기초재정수지 추이



주: 일반정부는 OECD 기준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합계

자료: 財務省, 『財政金融統計月報』, 각호 ; OECD (2007). *OECD Economic Outlook*, (NO.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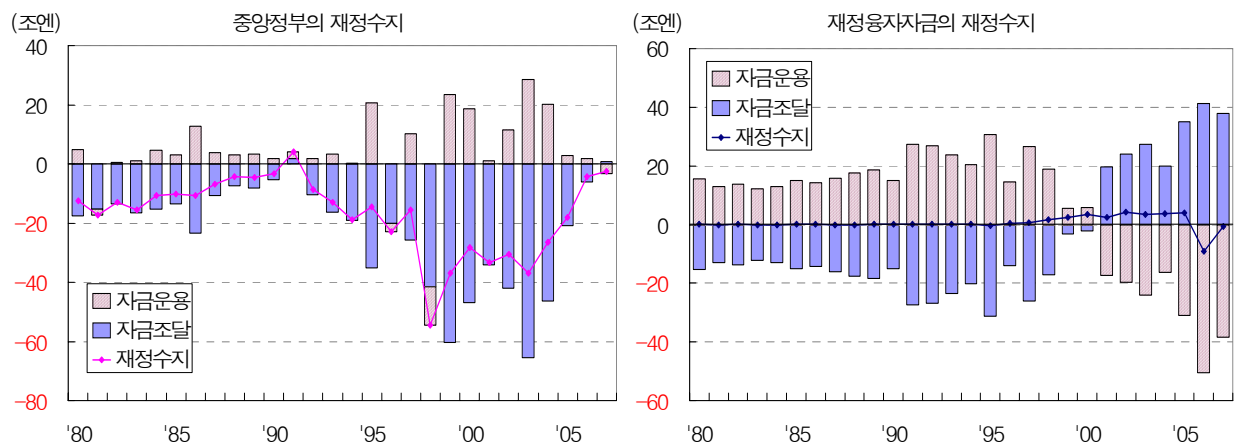
□ 부분적으로는 금융자산 감축에 따른 부채 증가속도의 둔화도 재정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

- 일본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서 중앙정부 계정^{<32>}을 보면 2003년 이후 부채의 증가속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재정수지가 빠르게 개선

<32>일본중앙은행 자금순환 통계에 나타나는 중앙정부 계정은 일반회계,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특별회계, 외국환자금특별회계, 도로정비특별회계, 항만정비 특별회계 등 각종 공공사업특별회계 등을 통합한 계정

- 세입-세출 차이인 재정수지 적자 축소 영향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증액이 중단된 영향도 작용^{<33>}
- 재정용자자금 계정도 2001년 이후 그간의 팽창노선에서 자산·부채가 동시에 감소하는, 소위 'Balance Sheet 압축' 경향으로 전환
- 특히 2006년에는 재정용자자금 약 12조엔을 국채 상환에 충당함으로써 부채 감소 폭 이상으로 자산 감축^{<34>}

주요 계정의 자산·부채 순증감 및 재정수지 추이



주: 2005년도 자금조달에서 일본도로공단의 민영화 영향(2005년 3/4분기 및 4/4분기 비금융공기업 계정의 자금조달 차액 약 46조엔)을 제외

자료: 日本銀行, 資金循環 통계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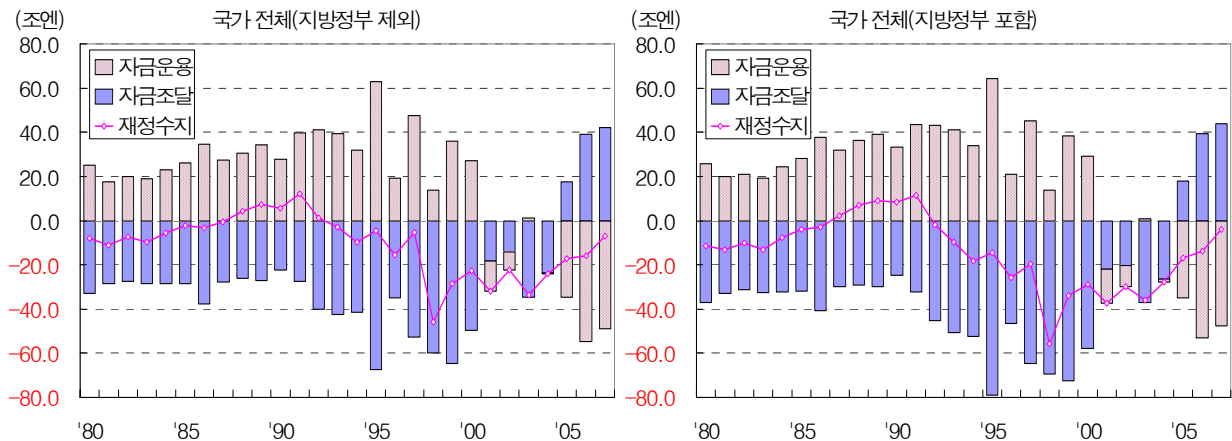
- 중앙정부, 재정용자자금, 공적연금을 합한 국가의 재정 합계에서도 금융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축소되는 Balance Sheet 압축 현상이 가시화^{<35>}

<33>19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정부보유 금융자산을 늘리면서 부채도 증가하였으나 2005~2006년도에는 총채무증가 폭이 급속히 감소

<34>財務省의 재정용자자금은 본원적인 공적금융기관의 성격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자산과 부채가 같은 금액으로 변화해 재정수지가 균형을 유지해야 하나, 1990년대 후반부터 재정용자자금도 일반금융기관처럼 수익을 내는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수지가 약간의 흑자상태로 유지

<35>이 때문에 '세출 삭감과 경기회복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실질적으로는 상당부분 금융자산 감축에 따른 채무 증가의 둔화에 의해 나타나는 '착시 효과'라는 평가도 있음(鈴木 準 (2008. 4.9.). "埋藏金 轉用과 財政收支"(資本市場調査部情報 96), 大和總研.

국가 전체의 자금·운용 조달 및 재정수지



주: 회계년도(당년 4월~익년 3월) 기준. 단, 2007년은 1~12월 기준

자료: 日本銀行, 資金循環 통계 DB.

- 결국 지속적인 세출 삭감과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자산·부채의 슬림화를 통한 국채비 및 신규 공채발행 감소가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
 - 기초재정수지가 마이너스 상태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채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채발행액은 오히려 감소^{<36>}
 - 이로 인해 1998년~2005년 연평균 34조엔씩 증가하던 공채잔고의 증가속도가 2006~2007년에는 10조엔으로 급감하고 재정수지 적자도 감소
- 일본정부는 2008년도 예산에서도 재정융자자금계정의 금리변동준비금 9.8조엔을 국채상환에 충당하여 이와 같은 효과를 꾀할 계획

기초재정수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

□ 벌써부터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이유로 2011년 목표 수치를 하향 조정

- 시나리오별^{<37>}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

<36>정부보유 금융자산 등을 공채상환에 충당하지 않는 한 기초재정수지가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채비가 증가하면 공채발행액은 필연적으로 증가

<37>세출삭감 14.3조엔 또는 11.4조엔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新성장 또는 성장 시나리오)와, 이와 반대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

- 당초 2007년 디플레이션 탈출을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더딘 속도(연평균 0.8~0.9%에서 同 0.1~0.2%로 둔화)로 진행됨에 따라 명목성장률이 크게 하락
- 실질성장률은 오히려 연평균 0.1% 정도 상향 조정

일본정부의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전망

(%)

		新성장(성장) 시나리오						제약(리스크) 시나리오					
		'07	'08	'09	'10	'11	평균	'07	'08	'09	'10	'11	평균
실	기존치	2.0	2.1	2.2	2.4	2.5	2.2	2.0	1.5	1.2	1.1	1.0	1.4
질	조정치	1.3	2.0	2.3	2.5	2.6	2.1	1.3	2.0	1.6	1.3	1.1	1.5
명	기존치	2.2	2.8	3.3	3.7	3.9	3.2	2.2	2.2	2.1	2.1	2.0	2.1
목	조정치	0.8	2.1	2.5	2.9	3.3	2.3	0.8	2.1	1.8	1.6	1.6	1.6
물	기존치	0.2	0.7	1.1	1.3	1.3	0.9	0.2	0.7	1.0	1.0	0.9	0.8
가	조정치	-0.5	0.1	0.2	0.4	0.7	0.2	-0.5	0.1	0.1	0.3	0.5	0.1

주 1: 2011년 세출 삭감 14.3조엔 경우의 경제성장 시나리오

2: 기존치는 2007년 1월 시점 전망치이며 조정치는 2008년 1월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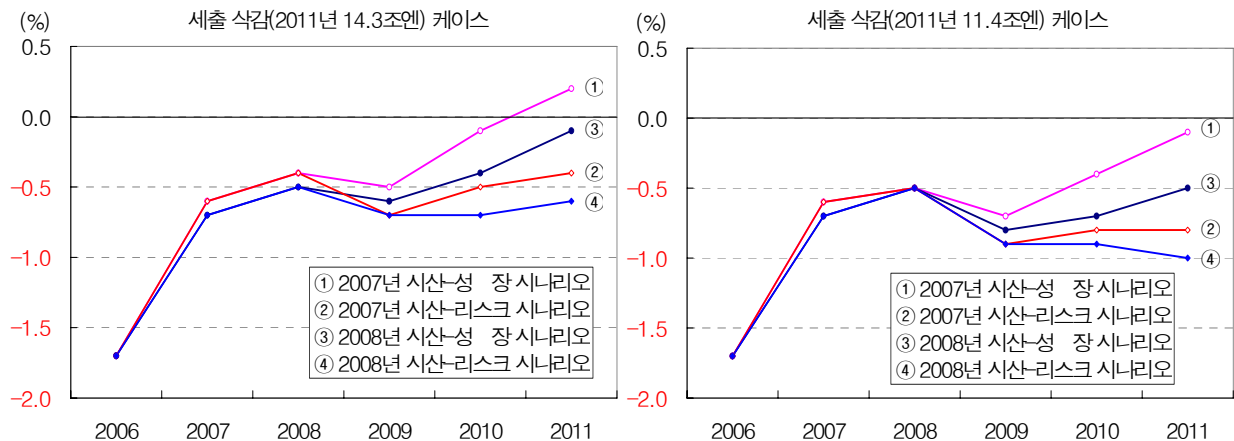
3: 물가는 GDP 디플레이터

자료: 內閣府 財政諮問會議, "日本經濟의 進路와 戰略"(2007년 1월 및 2008년 1월 시산).

- 이에 따라 2011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도 잇달아 하향 조정
 - 2007년 1월 시점 新성장 시나리오에서 기초재정수지의 GDP 비중을 2006년도 -1.7%에서 2011년도 0.2%의 흑자로 전망
 - 2007년 8월 시점 정부는 같은 시나리오에서 2007년도 명목성장률 전망을 종전 2.2%에서 2.1%로 낮추는 등 전제조건을 변경하면서 동 2011년 기초적재정수지의 GDP 비중도 0.0%로 하향 조정
 - 이어 2008년 1월 정부는 같은 시나리오에서 2011년 기초재정수지의 GDP 비중을 -0.1%로 적자 전망
- 게다가 세계경제의 성장 감속 등 외부환경까지 악화될 경우인 '리스크 시나리오'에서는 2011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중 목표가 -0.4%에서 -0.6%로 하락하여 적자 폭이 심화되는 것으로 상정

되지 않고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되는 시나리오(제약 또는 리스크 시나리오)로 구분

추계 시점별 기초재정수지 시나리오 추이



자료: 內閣府 財政諮問會議, "日本經濟의 進路와 戰略"(2007년 1월 및 2008년 1월 시산).

□ 따라서 기초재정수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

- 일본정부가 경제성장률 향상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 예상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GDP 대비 0.1~0.5%의 기초재정수지 적자
- 따라서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위해서는 최선의 시나리오에서조차 GDP의 0.1~0.5% 규모(약 0.5~2.5조엔)의 추가 세원 확보가 불가피^{<38>}

□ 증세의 대상으로는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 인상이 가장 유력

- 현재 일본의 소비세율은 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7.6%(EU 평균 19.3%)
- 중앙정부의 세입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하회
 - 일본은 18.9%인데 반해 OECD 국가 평균 27%를 상회^{<39>}

<38>일본정부가 소비세율 인상(당초 5%에서 7.5%로 2.5%p 인상)을 단행할 근거가 되는 수치의 하나로도 작용

<39>OECD (2007), Revenue Statistics 1965~2006.

OECD 주요국의 부가가치 세율



주: 2006~2007년 기준

자료: OECD (2007). *OECD Economic Outlook*, (NO. 82).

- 소비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해 세율이 넓어 소폭의 세율인상으로 많은 세수 확보가 가능
- 독일도 늘어나는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채무를 감축할 목적으로 최근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동원^{<40>}
- 따라서 일본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소비세율 인상 폭과 시기를 모색
- 정부 및 자민당은 소비세율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론화 시기를 저울질

향후 개혁의 추진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성장중시 정책'과 '재정재건중시 정책' 사이에서 힘을 허비
- 현재 일본은 '성장중시 정책'과 '재정재건중시 정책' 중 택일이 아니라 양자를 병행해야 하는 전략이 불가피

<40>2007년 종전 16%였던 부가가치세율을 19%로 인상

- 하지만 일본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성장중시' 노선과 '재정재건중시' 노선 사이에서 분명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성장중시 노선의 '아게시오派'는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증세 노선'에 대해 불만을 토로
- 자민당, 재정개혁연구회 등 재정재건과는 '성장중시'보다는 '증세를 통한 재정재건'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

- 아베의 뒤를 이은 후쿠다 총리는 '재정재건과 경제성장을 자동차의 두 바퀴'로 생각하는 소위 '후쿠다노믹스'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천전략은 부재
- 예컨대, 정책의 기본 방향의 하나인 세제개혁에 대해 '지금 당장 소비세를 올린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만 반복

- 일본중앙은행 총재 선임, 잠정세율 폐지 등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갈등에서 나타났듯이 후쿠다 정권의 정책 추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

- 일본중앙은행 총재 선임 과정에서 후쿠다 정권의 총재선임안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로 2번에 걸쳐 부결되면서 중앙은행총재 공석 사태가 발생
- 후쿠이(福井俊彦) 총재의 후임으로 당초 정부와 자민당은 무토(武藤敏郎) 부총재를 승격시키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
- 정부 및 자민당은 대안으로 다나미(田波耕治) 국제협력은행총재를 선임안으로 제시했으나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
- 결국 총재선임안이 기한 내(2008년 3월 19일) 가결되지 못해 부총재 시라카와(白川方明)가 중앙은행 총재를 대행하는 사태가 발생^{<41>}

- 휘발유세 등의 잠정세율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둘러싸고도 자민당과 민주당 간의 알력으로 인해 관련 법안(조세특별조치법 일괄 처리안)이 부결되는 등 정부의 조세정책에 차질이 발생
- 2008년 4월부터 가솔린 관련 세금 부담은 리터당 약 25엔 인하되었다가 5월부터 원래대로 환원되는 등의 혼란이 야기

<41>2008년 4월 9일 일본정부가 재차 시라카와 대행을 총재로 지명하는 안을 마련함으로써 겨우 일본중앙은행총재 선임안이 가결

가솔린 관련 잠정세율

- 가솔린 잠정세율은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석유소비 억제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부과한 가산세율이나, 누차 기한이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존속
- 잠정세율은 휘발유세 리터당 24.3엔, 지방도로세 同 0.8엔, 경유거래세 동17.1엔, 자동차 취득세(자가용) 취득원가의 2%, 자동차 중량세(자가용) 톤당 3,800엔 등인데, 기존 법대로라면 2008년 3월 말로 기한 종료
- 가솔린의 잠정세율 연장을 둘러싸고 정부·자민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당초 기한대로 3월 말로 잠정세율이 폐지되었으나 4월 말 개정조세특별조치법의 재정으로 가솔린세의 잠정세율이 부활
- 정부과 자민당은 '10년 연장',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

- 후쿠다 총리는 잠정세율을 연장(부활)하는 대신 2009년부터 도로특정재원^{<42>} 전액을 일반재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개혁의지를 보이면서 구심력 회복을 노리고 있으나 앞길이 험난
- 도로특정재원의 완전 일반재원화는 고이즈미, 아베 정권이 시도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던 정책으로 자민당 내 도로 관련 의원(일명 도로族)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민주당은 2008년부터 완전 일반재원화와 잠정세율 철폐를 주장

실질적인 세출 삭감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

□ 외형상 세출 삭감의 양적 목표는 비교적 손쉽게 달성할 수 있을 전망

- 2002~2006년 일본 정부의 기존 세출 추이는 연평균 1.4% 감소
-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비는 증가 추세(연평균 0.9%)였지만 인건비, 공공투자, 및 기타 경비는 감소

<42>잠정세율을 포함한 가솔린 관련세, 자동차 취득세, 중량세 등

- 반면 2011년 개혁을 상정하고 제시한 정부의 세출 목표는 기준년도인 2006년 대비 연평균 1.2~1.7% 증가한 수치로, 기존에 비해 오히려 둔화된 속도로 달성 가능한 수치
-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비는 증가속도가 가속되고 인건비, 공공투자 및 기타 경비의 감축속도는 크게 둔화되거나 오히려 증가세로 반전

<43>

- 반면 정부가 未개혁 시(개혁속도를 늦출 경우를 상정)의 2011년도 세출 전망치는 기준년도대비 연평균 3.6%씩 증가한 수치로 지금까지 추세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비현실적인 수치<44>

기준년도 대비 2011년 세출 목표의 증감률 비교

(조엔, %)

-	2002	2006	연평균 증감률	2011년 목표		연평균 증감률		2011년未개혁	
				개혁1	개혁2	개혁1	개혁2	금액	증감률
사회보장	30.1	31.1	0.8	38.3	38.3	4.3	4.3	39.9	5.1
인 건 비	31.2	30.1	-0.9	32.4	32.4	1.5	1.5	35.0	3.1
공공투자	24.7	18.8	-6.6	16.1	17.8	-3.1	-1.1	21.7	2.9
기 타	27.8	27.3	-0.5	27.1	28.3	-0.1	0.7	31.6	3.0
세출 합계	113.6	107.3	-1.4	113.9	116.8	1.2	1.7	128.2	3.6
세수 등	85.7	82.8	-0.9	111.7	111.7	6.2	6.2	111.7	6.2

자료: 財務省 (2008). 『日本の財政を 생각하다 - 平成 20年 6月』. <<http://www.mof.go.jp/jouhou/syukei/sy014/sy014i.htm>>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당초 목표치 이상의 실질적인 세출 삭감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

- 세수의 GDP 비중에서 볼 때 일본(33.7%, 2006년 기준)에 비해 이탈리아(45.6%), 프랑스(50.8%), 독일(43.8%) 등이 월등히 높지만, 90년대 중반 이들 국가의 재정수지가 개선된 주된 요인은 세출 삭감 효과

<43>예컨대 인건비의 경우 2002~2006년도는 연평균 0.6% 감소했으나 2006~20011년도는 연평균 1.5% 증가하는 형태

<44>1990~2006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계 세출(국채비 제외)의 연평균 증가율은 0.7%

- 일본 역시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세수 확보와 동시에 당초 목표치 이상의 실질적인 세출 삭감이 필요
- 실질적인 세출 삭감은 사회보장 관련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선거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
 - 예컨대 의료분야에서는 2008년 4월부터 70~74세 고령자의 창구부담을 종전 1할에서 2할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실행 시기를 1년 연기
- 추가적인 세출 삭감에 대한 의지 없이는 소비세 등 세수 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도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
 - 민주당은 소비세 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일본과 주요국의 세입세출의 GDP 비중 추이



자료: OECD (2007). *Economic Outlook*, (NO.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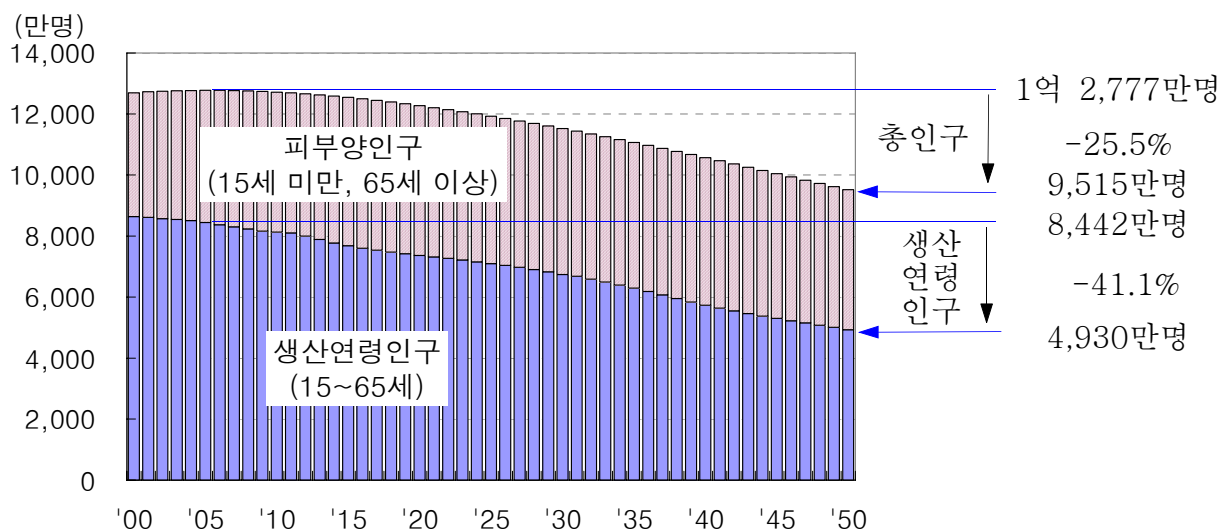
Ⅲ. 일본의 장기 재정 전망

1. 인구^{<45>} 및 경제성장률 전망

저출산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

- 일본의 인구는 200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0년 경에는 9,515만명으로 축소될 전망
- 총인구는 2005년 1억 2,77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6년에는 1억명 이하로 감소
- 특히 15세 미만의 아동인구가 2005년 1,759만명에서 2050년 821만명으로 2005년 대비 46.7% 수준에 불과
- 1978년(2,771명) 이후 감소세가 지속
- 이미 1996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든 생산연령인구도 2005년 8,442만명에서 2050년 4,930만명으로 감소

일본의 인구 추계



<45>기본적인 수치는 일본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추계치를 참조

(만명, %)

	2005	2020		2030		2040		2050	
총 인 구	12,777	12,273	-3.9	11,522	-9.8	10,569	-17.3	9,515	-25.5
생산연령인구	8,442	7,363	-12.8	6,740	-20.2	5,734	-32.1	4,930	-41.6
피 부 양 인 구	4,335	4,910	13.3	4,782	10.3	4,836	11.6	4,585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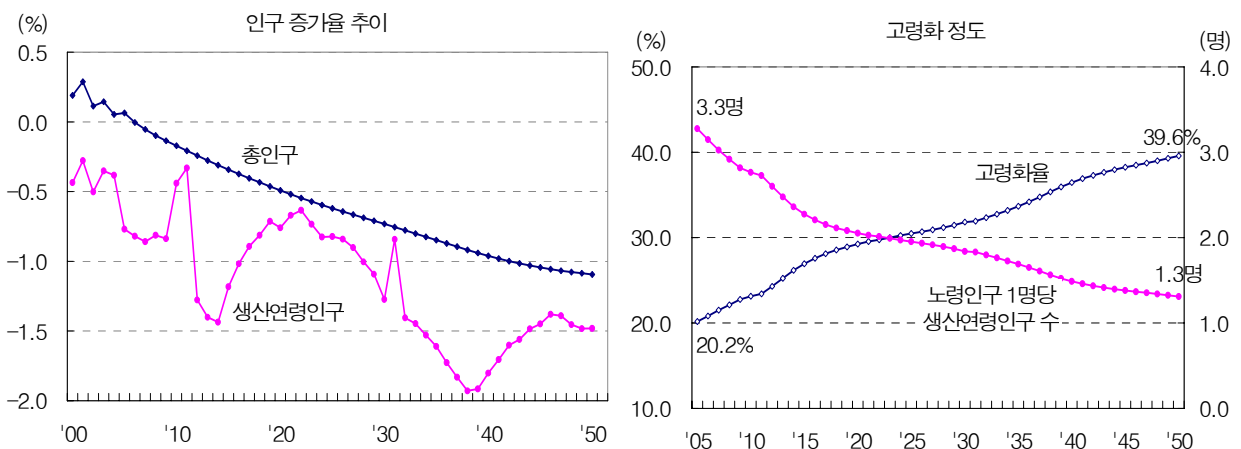
주: 출생 및 사망률 中位 수준을 가정

자료: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6), "日本の 將來推計人口(平成18年12月推計)".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속도가 총인구 감소속도보다 빨라 피부양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가속

- 2005년~2050년 생산연령인구의 연평균 감소율은 1.24%로 같은 기간 총인구의 감소율(0.64%)의 약 2배 수준
 - 총인구의 감소율은 매년 완만한 속도로 가속되어 2040년대에는 1.0~1.1%의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율은 2022년 0.6%에서 2038년 1.9%까지 가속되었다가 204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1.5%의 감소세를 보일 전망
- 생산연령인구와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5년 2,576만명에서 2050년 3,764만명으로 오히려 46.1% 증가

인구 증감률 및 고령화 추이(중위 추계 기준)



주: 고령화율=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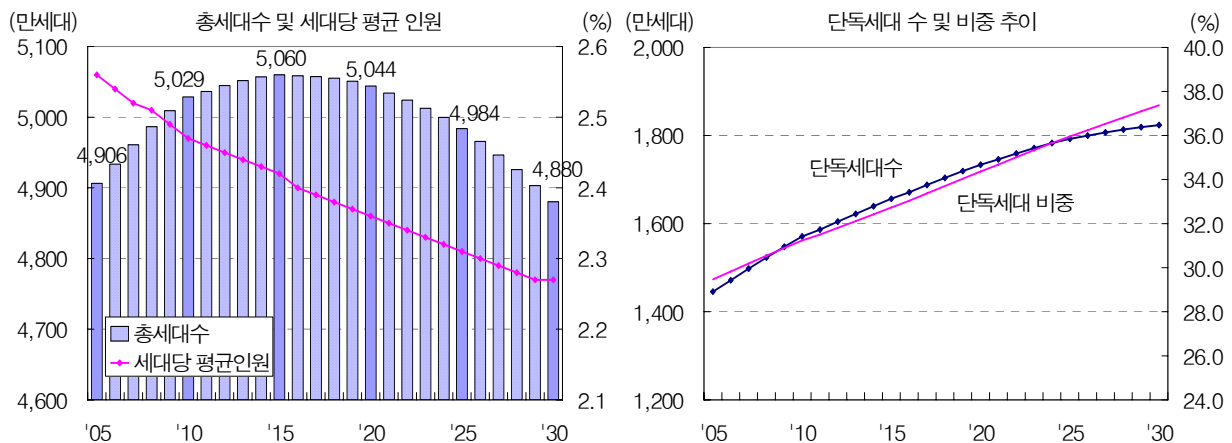
자료: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6), "日本の 將來推計人口(平成18年12月推計)".

- 그 결과 노령인구(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고령화율)은 2005년 20.2%에 2050년 40.5%로 급증
- 노령인구 1명당 생산연령인구는 같은 기간 3.3명에서 1.3명으로 급감

□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그리고 非婚化 경향까지 가세함에 따라 단독세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단독세대가 빠르게 증가

- 일본의 세대수는 2015년 5,060만 세대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 경에는 4,880만 세대까지 감소
- 하지만 고령화에다 非婚化 경향까지 가세하여 단독세대가 빠르게 증가
- 2030년 단독세대는 2005년 1,446만 세대보다 26.1% 증가한 1,824만 세대로 전체대의 37.4%를 차지

일본의 세대 추이



자료: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8), "日本 世帯數의 將來推計(2008年 3月 全國推計)".

- 특히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단독으로 생활하는 '독거노인' 세대가 대폭 증가
- 2005년 386만 세대에서 2030년 717만 세대로 증가

단독세대 중 65세 이상 세대(독거노인) 추이

(만세대, %)

	2005	2007	2010	2015	2020	2025	2030
65세 이상 단독세대	386	421	465	562	631	673	717
단독세대 대비 비중	26.7	28.1	29.6	33.9	36.4	37.5	39.3

자료: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8), "日本 世帯數の 將來推計(2008年 3月 全國推計)".

□ 당초 예상보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속도가 가속

-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가 예측한 '일본의 장래추계인구'를 보면 2006년 추계치가 2002년 추계치에 비해 인구 소와 고령화 속도가 가속
· 생산연령인구 감소속도가 느려지고 노령인구 증가속도는 빨라짐에 따라 2050년 고령화율이 종전 35.7%에서 39.6%로 3.9%p 증가

2002년 대비 2006년 추계치 비교

(만명, %)

	총인구			생산연령 인구			65세 이상 인구		
	'02	'06	증감	'02	'06	증감	'02	'06	증감
2005	12,771	12,777	6	8,459	8,442	-17	2,539	2,576	37
2020	12,411	12,273	-137	7,445	7,363	-82	3,456	3,590	134
2030	11,758	11,522	-236	6,958	6,740	-217	3,477	3,667	190
2040	10,934	10,569	-364	6,099	5,734	-365	3,633	3,853	219
2050	10,059	9,515	-544	5,389	4,930	-459	3,586	3,764	178
증감	-21.2	-25.5	-4.3	-36.3	-41.6	-5.3	41.2	46.1	4.9
율	-0.53	-0.65	-0.12	-1.00	-1.19	-0.19	0.77	0.85	0.08

주: 증감률의 상단은 2005년 대비 2050년 증감률, 하단은 2005~2050년 연평균 증감률

자료: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8), 日本의 將來推計人口 DB 2002년 1월, 2006년 12월.

□ 고령화의 가속으로 사회보장비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여 재정을 압박

- 과거 추세를 볼 때 사회보장비는 65세 인구의 규모 또는 고령화율과 밀접한 관계^{<46>}를 나타내고 있음

- 1980~2007년 사회보장 관련 지출과 고령화율과의 관계를 비교하면 거의 일치(결정계수가 0.9793)
- 같은 기간 사회보장 관련 지출과 고령인구 간의 관계에서도 결정계수가 0.9804로 거의 일치

일본경제의 성장률 저하는 불가피

□ 인구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일본의 장래 인구구조는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

- 지금까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분 이상의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였지만 향후 생산성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분을 커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일인당생산성 증가율을 0.9% 수준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인구감소율은 향후 더욱 가속

일인당 생산성 상승률과 생산연령증가율 비교

(%)

-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일인당 생산성	0.3	0.1	0.1	0.2	0.4	0.7	0.8	0.9	0.9	0.9	0.9
생산연령인구	0.3	-0.1	-0.1	-0.1	-0.2	-0.4	-0.3	-0.5	-0.4	-0.4	-0.8
초과 생산성	0.6	-0.0	-0.0	0.1	0.2	0.3	0.5	0.4	0.5	0.5	0.1

주: 초과 생산성은 인당 생산성 증가율-생산연령인구 감소율

자료: 內閣府 財政諮問會議, "日本經濟의 進路와 戰略"(2007년 1월 및 2008년 1월 시산).

- 특히 일본의 인구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2030년 이후에는 수요(총인구)와 공급(생산연령인구) 양면에서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인구 감소 문제는 향후 일본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46>사회보험비는 연금·의료 등과 관련한 국고부담분으로서 사회보장관계비의 대부분(2007년 기준 80%)을 차지하는데, 이는 연금수령자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

□ 대부분 일본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향후 인구문제로 인해 일본경제의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

- 日本經濟研究센터는 2009년 2% 성장세를 회복한 후 2020년 1.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47>}
-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 호조와 내수에서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건강·의료관련 소비 호조에 힘입어 비교적 건조한 성장세를 지속
- 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일본의 중기 경제성장률 전망(일본경제연구센터 예측치)

(%)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경제성장률	1.3	1.9	2.0	1.6	1.7	1.5	1.5	1.5	1.4	1.6	1.5	1.5	1.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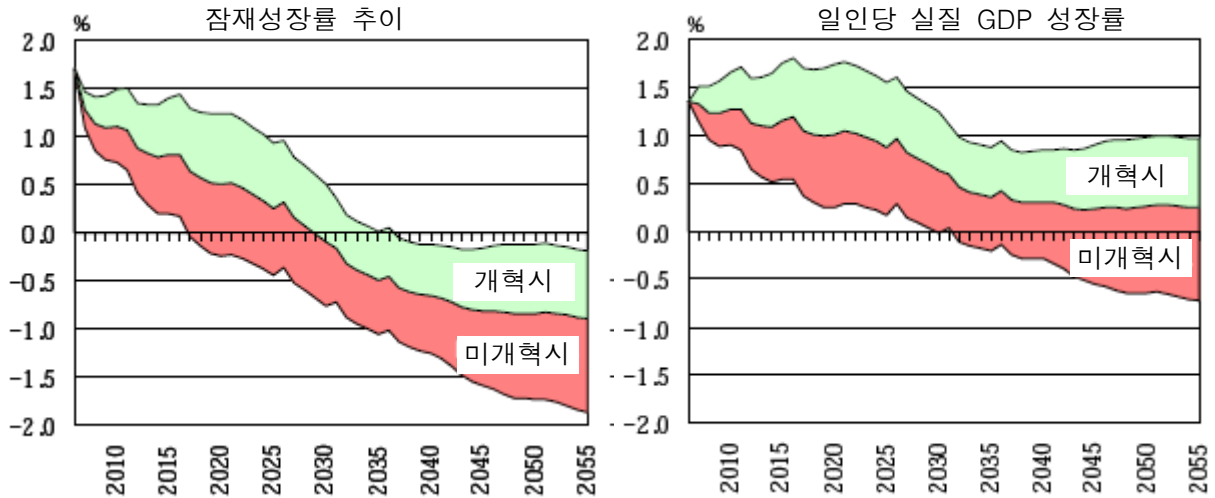
자료: 日本經濟研究센터 (2008). “第34回 中期經濟豫測(2007~2020年度)”. <<http://www.jcer.or.jp/research/middle/detail3680.html>>

- 經濟同友會는 빠르면 2010년대 후반, 늦어도 2030년대 후반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
- 경제·사회 제반 요소가 현 추세대로 갈 경우 생산성 증가율이 정체되고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하락, 자본 스톡 압박 등으로 빠르면 2010년대 후반, 늦어도 2020년대 후반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 인구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제반의 다양한 개혁·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인당 실질 GDP 신장률은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으나 경제성장률의 마이너스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결국 일본은 이대로 갈 경우 위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고, 현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개혁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48>}

<47> 日本經濟研究센터 (2008). “第34回 中期經濟豫測(2007~2020年度)”. <<http://www.jcer.or.jp/research/middle/detail3680.html>>

<48> 經濟同友會는 2006년 12월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의 인구추계 결과를 평가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상응하는 만큼의 생산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며, 이는 생산성 향상이나 구조개혁으로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森田富治郎 (2007. 4. 11.). "日本の未來는 정말 괜찮은가?— 재차 문제시하는 少子化對策." 經濟同友會提言·意見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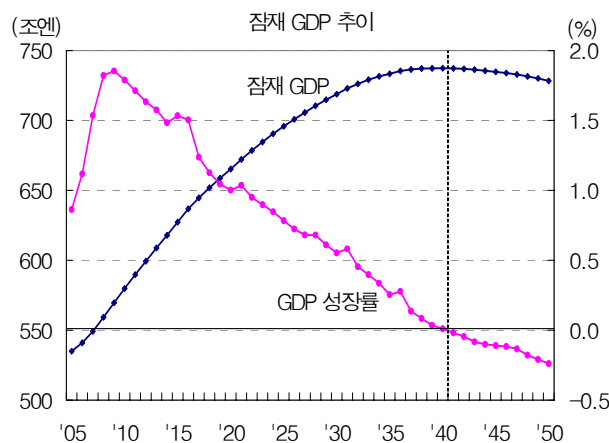
일본의 잠재성장률 및 일인당 실질GDP 성장률 전망



주: '개혁시'는 인구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제반의 다양한 개혁·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경제·사회 제반 요소가 현추세대로 갈 경우를 상정
 자료: 森田富治郎 (2007. 4. 11.). "日本の 未来는 정말 괜찮은가? - 재차 문제시하는 少子化對策." 經濟同友會提言·意見書.

- 미즈호總合研究所도 일본의 잠재 GDP 성장률이 2009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0년대에는 1% 미만,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49><50>}

일본의 잠재 GDP 및 GDP 증가율 추계



	GDP(조엔)	연평균 성장률
2006~2010	580	1.62
2011~2015	627	1.59
2016~2020	665	1.18
2021~2025	696	0.90
2026~2030	719	0.65
2031~2035	733	0.40
2036~2040	737	0.11
2041~2045	735	-0.07
2046~2050	728	-0.18

자료: 草場富治郎 (2007). "일본 潜在 GDP의 長期推計". 『미즈호總研論集』, 2007년 III号.

<49>잠재노동투입량, 잠재자본투입량을 추계한 후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에 대입하여 추계(草場富治郎 (2007). "일본 潜在 GDP의 長期推計". 『미즈호總研論集』, 2007년 III号.)

<50>본고 '재정 전망'에서 'Base Line 경제성장률'로 활용

2. 재정 전망

기초재정수지 흑자는 가능하지만 국가채무잔고는 발산

- 경제성장률 추이가 Base Line^{<51>}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사회보장비 추계 및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가정에 따라 크게 6개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각종 재정관련 지표를 추정^{<52>}
- 사회보장비는 고령화 정도, GDP, 사회보장비의 과거 실적치(추세선) 3가지를 토대로 계산한 추계치를 각각 사회보장비 1, 2, 3으로 표기
 - 사회보장비 1, 2, 3: 1=f(고령화 정도), 2=f(GDP), 3=f(추세선)
 - 소비세율 인상시기에 따라 세입 관련 변수로 다음 2가지 경우를 가정
 - 인상 후 동결: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1년 7.5%로 인상한 후 동결하는 경우
 - 추가 인상: 2016년 10%로 추가 인상하는 경우

Base Line 경제성장률 가정하에 세입·세출 관련 추계 방법에 따른 시나리오

	세출 관련	세입 관련
구분 변수	사회보장비 1, 2, 3	인상 후 동결, 추가 인상
시나리오 개수	3	2

- 현 일본정부가 기존의 경제·재정개혁 노선을 지향한다는 전제^{<53>}하에 일본은 2010년대 이후 어느 정도 기초재정수지의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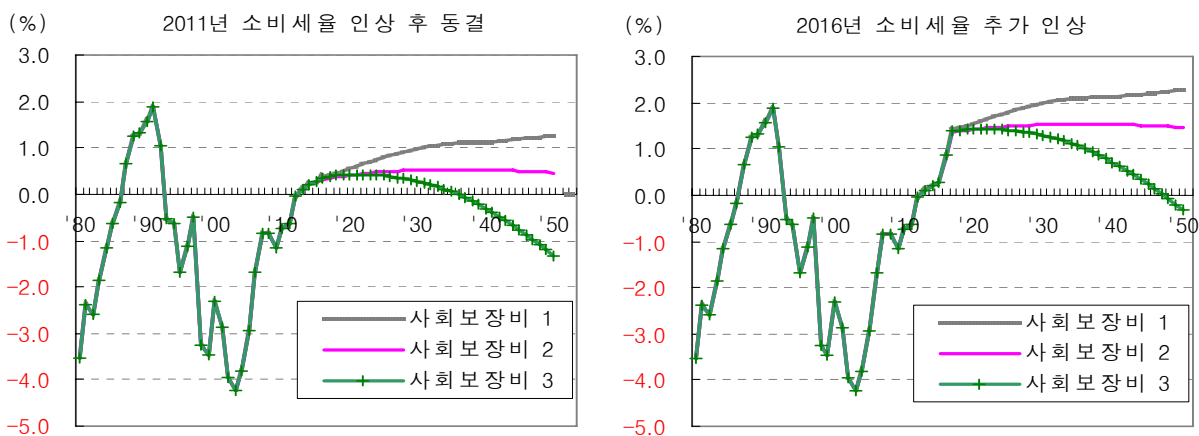
<51>미즈호總合研究所의 잠재 GDP 추계치(草場富治郎 (2007). "일본 潜在 GDP의 長期推計". 『미즈호總研論集』, 2007년 Ⅲ号.) 참조

<52>구체적인 전망 내용은 부록(일본의 재정전망)을 참조

<53>재정정책의 기본노선은 고이즈미 정권 이후의 세출 삭감·재정재건 노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참의원에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기존정책 노선이 급격하게 전환된다거나, 차기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교체 및 재정정책의 크게 바뀔 수도 있으나, 그에 대한 가능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

- 사회보장비 지출이 경제성장률 이하의 증가 추이를 나타낼 경우(사회보장비 1, 2의 경우) 기초재정수지는 2013년 흑자로 전환
- 하지만 사회보장비 지출이 현재의 추세를 지속할 경우(사회보장비 3) 추가 세원 확보(소비세율 인상 등) 없이는 2030년대 중반에는 기초재정수지가 재차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

기초재정수지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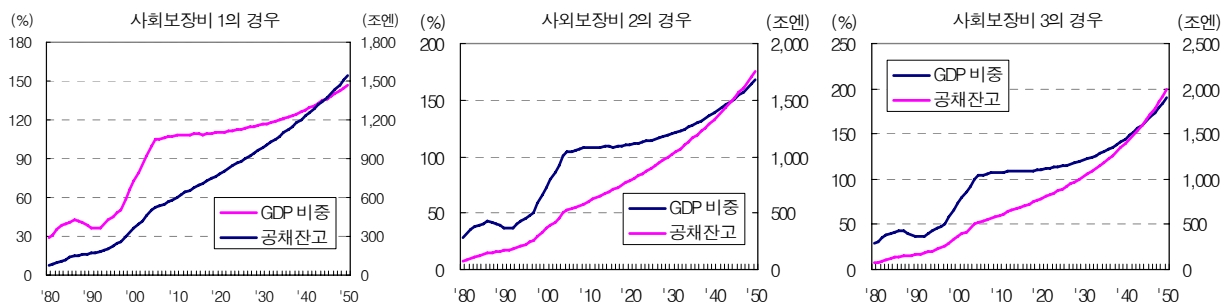
자료: 財務省, 内閣府, 미즈호總合研究所 (2007) 등을 토대로 필자 추계

-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하지 않으면 공채잔고가 GDP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재정 파탄 가능성도 증폭
- GDP 대비 공채잔고 비중은 일정기간 동안 105~109% 내외의 안정적인 추이를 보인 후 재차 빠른 속도로 증가
 - 2011년 소비세를 인상한 경우 대체적으로 201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다가 202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
- 2016년 소비세를 추가 인상한 경우에는 GDP 대비 공채잔고 비중이 적어도 2030년대까지는 안정적인 추이를 시현
 - 사회보장비지출이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우(시나리오 1)에는 GDP 대비 공채잔고 비중의 하락 가능성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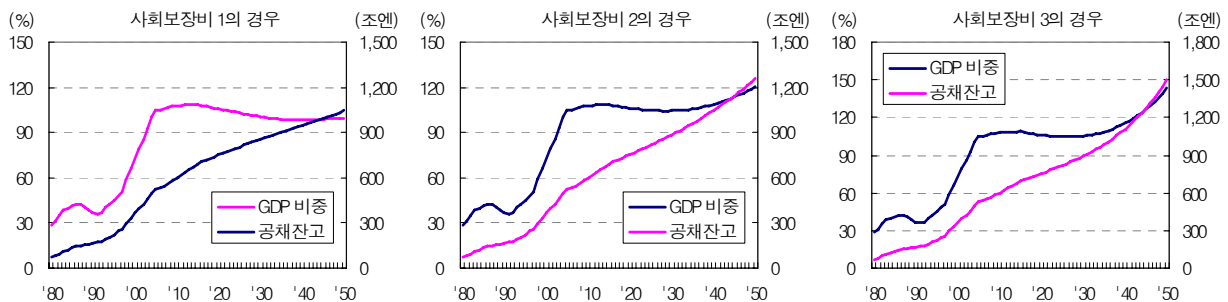
- 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속적인 세원을 발굴하지 않으면 공채잔고가 누적되어 재정이 바닥날 수 있음을 시사
- 경제 성장력을 유지하면서도 세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 GDP 대비 공채잔고의 비중은 發散^{<54>}

공채잔고와 공채잔고의 GDP 대비 비중 추이

<1> 2011년 소비세율 인상(종전 5%→7.5%) 후 동결하는 경우



<2> 2016년 소비세율을 추가 인상(종전 7.5%→10%)하는 경우



자료: 財務省, 内閣府, 미즈호總合研究所 (2007) 등을 토대로 필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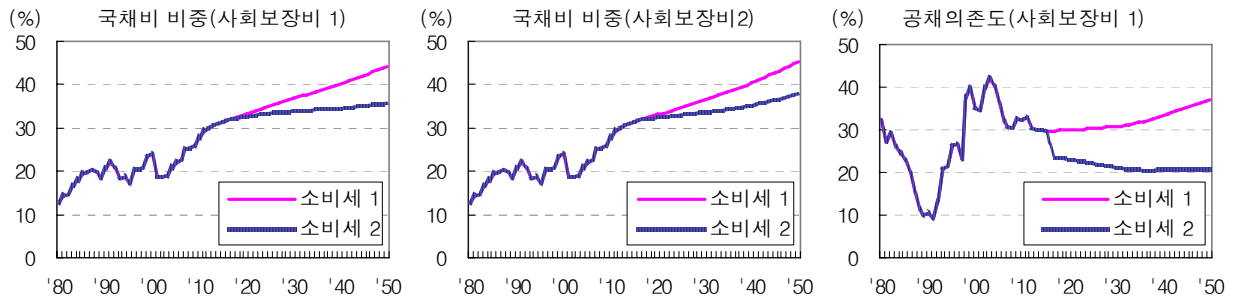
□ 세입·세출에서 공채발행액, 국채비의 비중을 볼 때도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하지 않으면 재정의 경직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세출에서 국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2007년 25% 수준에서 2040년대에는 40%를 초과할 전망
 - 소비세율 등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경우에는 35% 수준에서 안정
- 세입 중 공채의존도(세입 중 공채발행액 비중)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현 수준(30% 내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54> 2016년 소비세율을 종전 7.5%에서 10%로 인상하고, 사회보장비도 2020년 이후 고령인구에 비례하여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 따라서 재정의 경직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 세원 발굴이 긴급

세출·세입에서 국채비, 공채발행액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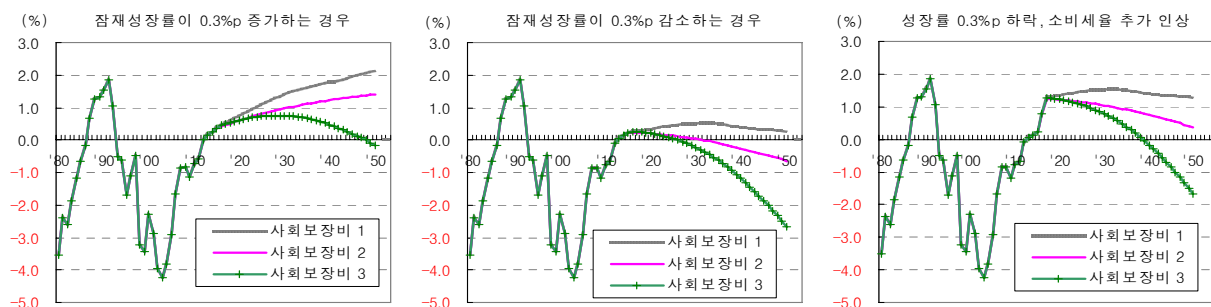
주: 1은 2011년 소비세율 인상 후 동결, 2는 2016년 소비세율 추가 인상의 경우
 자료: 財務省, 内閣府, 미즈호總合研究所 (2007) 등을 토대로 필자 추계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가 필수

□ 경제성장률 제고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에 가장 결정적 요인

-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경우 기초재정수지 흑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잠재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0.3%p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초재정수지는 플러스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비관적인 시나리오(시나리오 3)에서도 2040년대 후반에야 적자로 전환

잠재성장률 증감에 따른 기초재정수지의 변화 추이



자료: 財務省, 内閣府, 미즈호總合研究所 (2007) 등을 토대로 필자 추계

- 반대로 생산성 향상, 개혁 등에 실패하여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소비세 인상 등 조세를 늘리더라도 기초재정수지는 적자로 전락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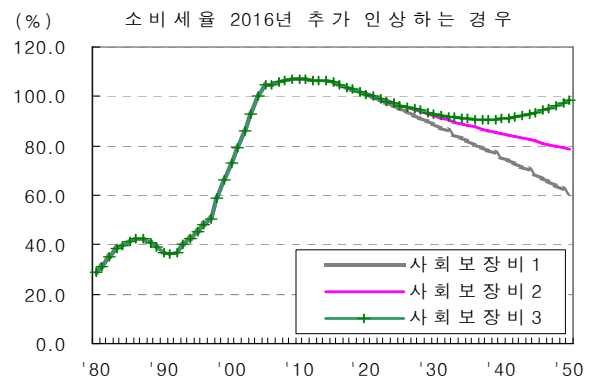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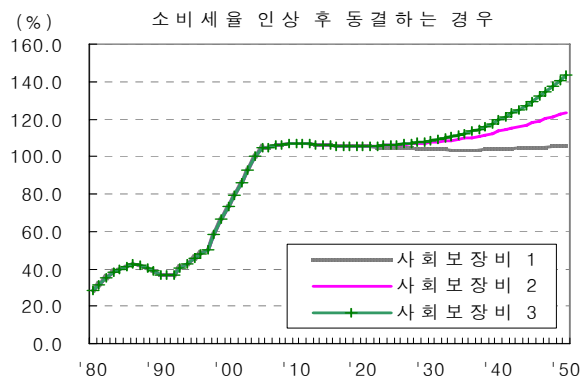
- 잠재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0.3%p 낮아지는 경우에는 2016년 소비세율을 추가 인상하더라도 기초재정수지가 2030년대 초반에 적자로 전락

□ 국가채무잔고 및 GDP 비중 역시 경제성장률 제고 정도에 따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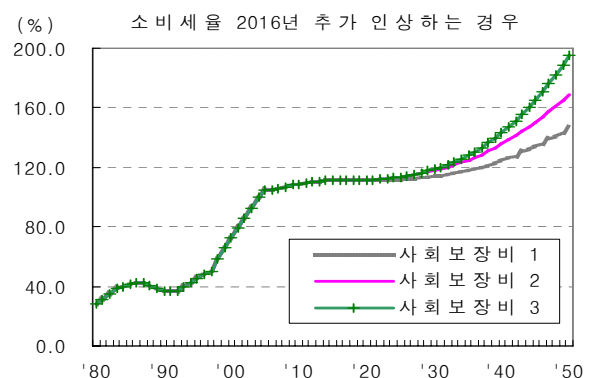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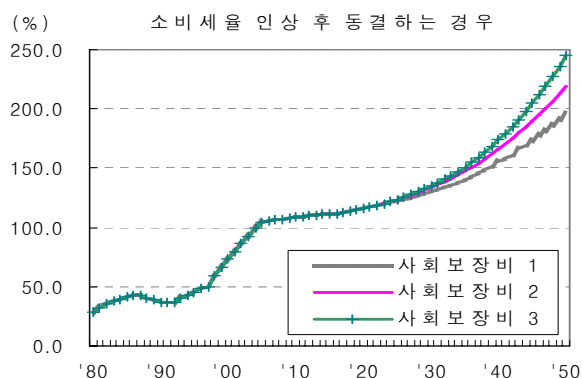
- 잠재성장률이 제고(당초 대비 0.3%p 증가)될 경우 공채잔고는 늘어나겠지만 사회보장비를 경제성장률 이하로 통제할 경우 공채잔고의 GDP 비중은 일정 수준에서 안정세 유지가 가능
-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할 경우 사회보장비 지출에 관계 없이 공채잔고를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 가능
-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당초 대비 0.3%p 감소) 공채잔고는 물론 GDP 대비 비중도 발산하여 재정 과탄의 가능성이 증폭
- 추가적인 세원을 발굴하더라도 공채잔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

잠재성장률 증감에 따른 공채잔고의 GDP 비중 추이

<잠재성장률이 0.3%p 증가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0.3%p 하락할 경우>



자료: 財務省, 内閣府, 미즈호總合研究所 (2007) 등을 토대로 필자 추계

□ 이상과 같이 사회보장 지출, 소비세율, 잠재성장률 3개 변수에 따라 총 18개 시나리오를 종합할 때 일본재정의 장기 전망은 대체적으로 비관적

- 18개 시나리오 중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55>}되는 경우는 시나리오 4, 7, 10, 11, 12 5가지

시나리오별 기초재정수지 및 공채잔고의 GDP 비중 추이

-			잠재성장률					
			Base Line		0.3%p 증가		0.3%p 하락	
			재정수지	공채잔고	재정수지	공채잔고	재정수지	공채잔고
소비세	인상후 동 결	사회보장비1	1 +	발산	7 +	안정	13 +	발산
		사회보장비2	2 +	발산	8 +	발산	14 -('32)	발산
		사회보장비3	3 -('36)	발산	9 -('48)	발산	15 -('27)	발산
	추가 인상	사회보장비1	4 +	안정	10 +	수렴	16 +	발산
		사회보장비2	5 +	발산	11 +	수렴	17 +	발산
		사회보장비3	6 -('48)	발산	12 +	안정	18 -('39)	발산

주 1: 각 항의 번호는 시나리오 번호, ()안 연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기를 표시

2: 사회보장비 1, 2, 3은 사회보장비 추계 시 사용한 독립변수에 따른 구분으로서, 사회보장비1=f(고령화율), 사회보장비2=f(GDP), 사회보장비3=f(추세선)을 나타내며, 사회보장비1이 가장 완만하고 사회보장비3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냄

3: 공채잔고는 GDP 비중으로, 발산은 증가세 지속, 안정은 현상태 유지, 수렴은 하락세

□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잠재성장률을 제고함으로써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것임

- 현재의 인구구조에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로는, 일본정부가 기존의 경제·재정개혁 노선만 견지할 경우 2010년대 이후 기초재정수지가 흑자화되더라도 국가채무잔고는 지속적으로 발산
- 국가채무잔고를 GDP의 일정비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 등 추가 세원 확보가 필요하지만 국민의 반대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 예상
- 잠재성장률이 '당초 예상(Base Line)'보다 제고될 경우에는 소비세율 인상

<55>기초재정수지 흑자와 국가채무(GDP 비중)의 현상 유지를 동시에 달성

없이도 재정지출 삭감만으로도 재정건전화 수단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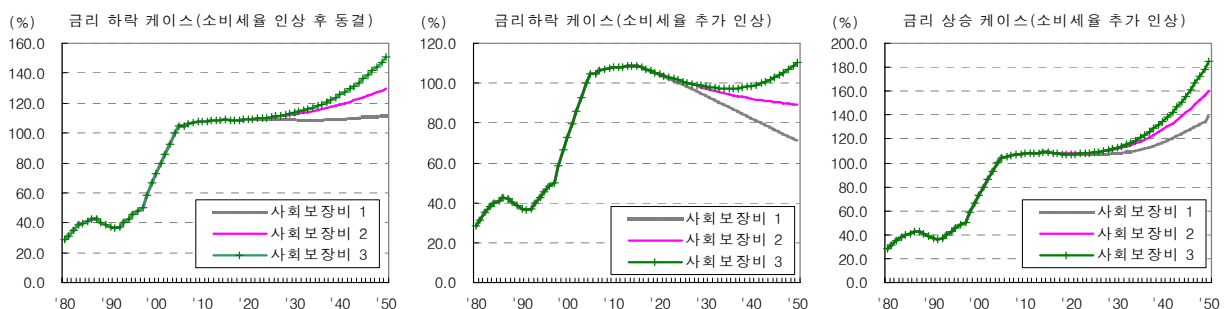
- 이 경우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 등의 정책적 수단과 소비세율 인상을 병행할 수 있어 증세에 대한 국민의 반대 극복이 비교적 용이

- 반대로 잠재성장률이 당초 예상(Base Line)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초 재정수지 적자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재정 파탄 가능성도 증폭

□ 여기에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채비 부담이 팽창함에 따라 재정 파탄 가능성도 증폭

- 장기금리가 하락할 경우 공채의 평균이자율도 하락하고 그에 따라 국채비, 공채발행액 및 공채잔고도 감소
-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공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국채비도 증가
 - 이에 따라 공채발행액, 공채잔고, GDP 대비 공채잔고 비중을 빠른 속도로 발산함에 따라 재정파탄 가능성이 증폭^{<56>}
- 동시에 공채잔고 증가는 장기금리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금리와 공채잔고가 연쇄적으로 작용, 재정 파탄의 시기를 가속화할 가능성^{<57>}

장기금리 등락에 따른 공채잔고 및 공채잔고의 GDP 비중 변화



자료: 財務省, 内閣府, 미즈호總合研究所 (2007) 등을 토대로 필자 추계

<56>· 소비세율을 인상하더라도 GDP 대비 공채잔고 비중이 발산

<57>"재정적자(정부채무)의 증가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논문은 많지 않고, 특히 2000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정부채무가 증가하면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결론을 낸 논문이 많다"(Gale, William G. and Orszag, Peter R. (2004). The US Budget Deficit On an Unsustainable Path. New Economy, 11(4), 236-242.)

IV. 일본의 과제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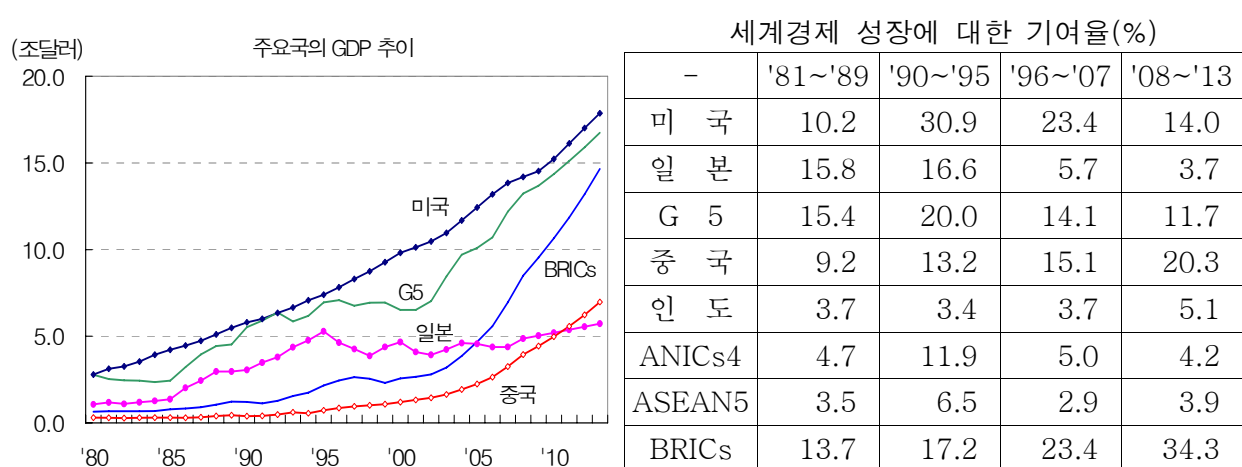
1. 일본의 과제와 한계

경제력 약화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저하

□ 90년대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이 크게 약화

- 일본의 경제규모(달러 기준)는 1995년 이후 정체되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17.9%에서 2007년 8.1%로 하락
- 1980년대 및 1990년대 전반 15~17%에 달하던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일본의 기여율은 1990년 후반 이후 5% 대로 하락
- 일본경제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동안 중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2011년에는 중일 간 경제규모 역전이 기정 사실화^{<58>}
- 중국의 GDP 성장률이 2009~2011년 연평균 6%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한 2011년 중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을 역전

주요국의 GDP 규모 및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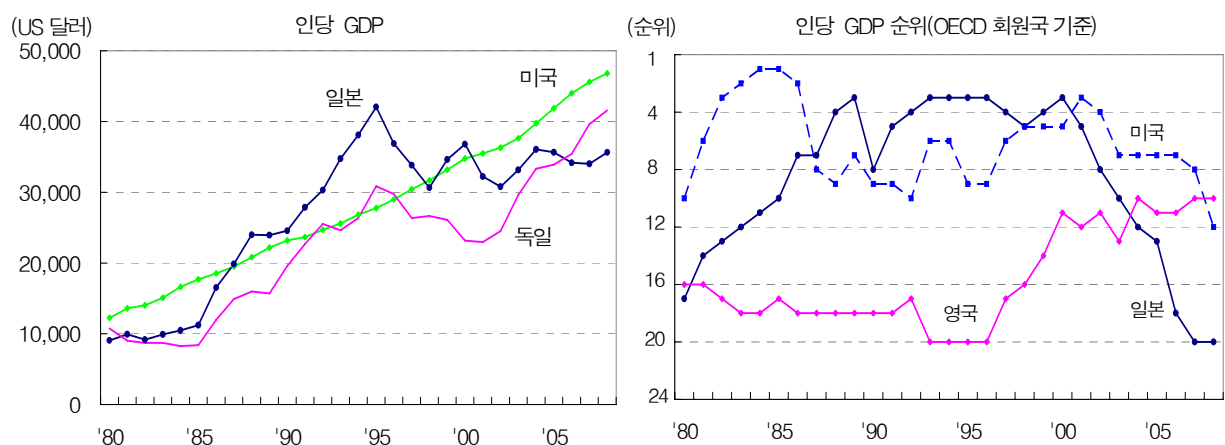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April 2008 Edition).을 토대로 필자 작성
 <58>중국의 GDP는 이미 2005년에 2조 2,437억 달러로 'ANICs4+ ASEAN5(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9개국)'의 규모(2조 1,966억 달러)를 능가

□ 일본은 풍요로운 국가에서 쇠퇴하는 국가로 이미지가 급추락

- 2007년 일본의 인당 GDP는 3만 4천 달러로 과거 최고였던 1995년 4만 2천 달러에 비해 약 20% 하락
- OECD 국가에서 차지하는 순위도 90년대 중반 3위에서 2007년 20위로 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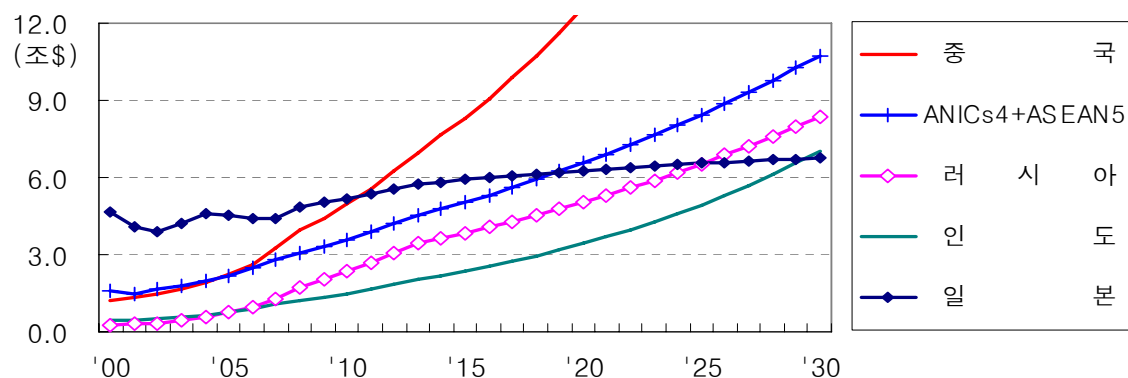
일본의 일인당 GDP 및 세계순위 순위



자료: IMF,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April 2008 Edition).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동아시아 내에서도 일본경제의 위상 저하가 불가피

동아시아 지역 내 주요 국가·블록 간 경제규모 비교



주: IMF,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April 2008 Edition).의 2008~2013년 전망치(단, 일본과 중국의 2008~2020년 전망치는 SERI 추계치)를 토대로 2030년까지 연장

- 중국 외에도 인도, ASEAN 제국 등의 아시아 신흥국과 러시아 등 자원 부국들이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급부상
- 이로 인해 일본경제는 2010년대 후반 'ANICs 4+ ASEAN 5'에 역전당하고, 2025년 경에는 러시아, 2030년 경에는 인도에 각각 역전될 전망

내적 성장력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대외개방이 불가피

□ 재정건전화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인해 내적으로는 성장력을 확충할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

- 2010년대 초반까지는 재정개혁을 위한 정책 실행과 기존의 성장동력 등으로 1%대 중반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
- 하지만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한 2011년 이후 국가채무잔고를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원 확보가 불가피한데, 이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기초재정수지 흑자는 이미 세출 삭감의 결과이므로^{<59>} 추가적인 세출 삭감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은 고려하기 힘든 대안으로 판단
- 서브프라임 사태, 원자재 위기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경기가 위축되고 재정압박으로 인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도 한정

□ 노동력률^{<60>} 제고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에서 오는 악영향을 완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나 인구고령화가 노동력률을 저하시키는 압력을 작용

- 고령자의 노동력률은 젊은 세대보다 낮기 때문에 연령별 노동력률이 현

<59>3% 이상의 명목성장률을 달성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달성 전략

<60>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력인구의 비율(=노동력인구÷15세 이상인구×100)로서 노동참가율 또는 경제활동참가율이라고도 함. 단 노동력인구는 생산연령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취업자와 완전실업자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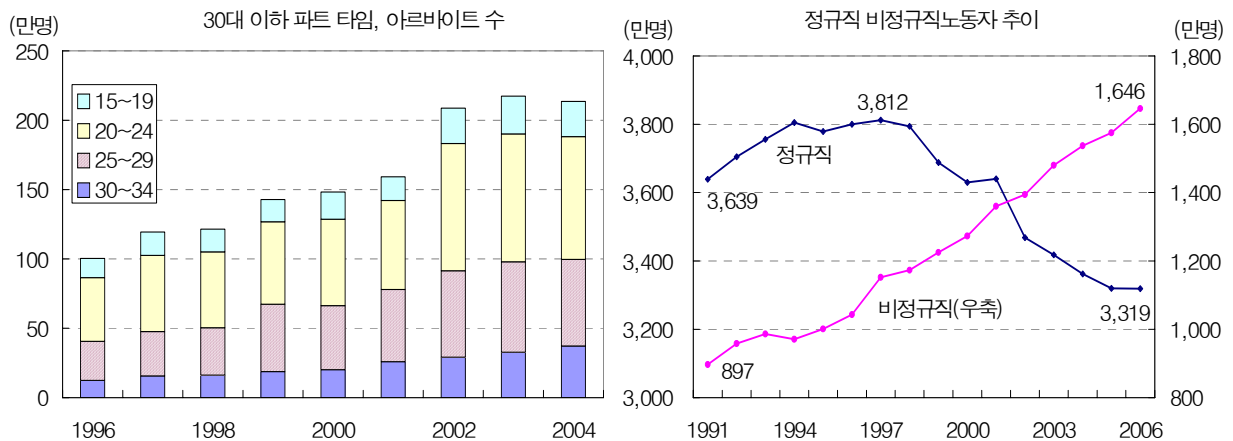
수준의 추이를 지속할 경우 일본 전체의 노동력률은 2005년 60% 수준에서 2020년 55% 수준으로 저하될 전망^{<61>}

- 인구고령화는 일인당 노동시간 측면에서도 감소요인으로 작용^{<62>}
-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짧은 60세 이상 노동자가 증가하는 데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해외이전 또는 고용의 비정규직화 등의 결과에 기인

□ 노동력의 질적 저하마저 우려되는 실정

- 버블 경제로 인한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과거에 비해 사회적 기강이 해이해지고,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면서 직업윤리가 약화
- 최근 수년간 일본에서는 교육 등과 같이 장기적이고 모호한 대가에 대해서는 현재의 투입(공부)을 꺼려하고, 기대치에 비해 보수가 낮은 노동(정규직)보다는 자유노동을 선택함으로써 프리터族과 니트族 등이 양산
- 20~30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노동과 교육을 기피하는 풍조가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일본 사회의 질적 하락도 예상

비정규직 고용 인구 추이



자료: 中小企業廳 (2006), 『中小企業白書2006』 ; 總務省, 勞動力調査 통계 DB(2001년까지는 特別調査)

<61>松村秀樹 (2008). "高齡化가 日本經濟에 미치는 影響-成長率低下 리스크 檢證." 『BER』, 2008年 7月號, 日本綜合研究所.

<62>松村秀樹 (2008). "高齡化가 日本經濟에 미치는 影響-成長率低下 리스크 檢證." 『BER』, 2008年 7月號, 日本綜合研究所.

- 1947~1949년에 태어난 단카이(團塊) 세대가 60세 정년을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은퇴함에 따라 그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모노즈쿠리 능력)을 지탱해온 기술 인력의 부족도 가시화
- 게다가 저출산과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인해 향후 대졸 신규 기술자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
 - 1998년 47만 2,252명이던 공과대학 학생 수는 2007년 41만 8,713명으로 11.3% 감소

□ 따라서 일본은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성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시아 제국과의 공생방안 모색이 불가피

-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 중국, 인도, ASEAN 등의 동아시아를 성장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FTA(EPA)^{<63>}를 적극 추진
 -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모습

- 동아시아 경제통합(FTA, EPA)을 둘러싼 2가지 방향의 논의
 - 'ASEAN+ 3(ASEAN 10개국과 한중일)'와 'ASEAN+ 6('ASEAN+ 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안) 2가지 案이 경합
 - 일본은 'ASEAN+ 6'를 선호(인도를 비롯하여 일본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호주, 뉴질랜드를 끌어들이므로써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 중기적으로는 'ASEAN+ 3'案이 유력하나 장기적으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을 포함하는 거대 경제권역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향후 10년 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전망

<63>FTA가 특정 국가나 지역간 관세를 삭감하거나 서비스 무역 장벽 등을 없애는 데 반하여, EPA는 FTA를 핵심으로 하되 인적·물적·금전적 이동까지 포함하여 자유화함으로써 폭넓은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형태(WTO는 세계 전체적으로 관세 삭감을 추진). 1990년 27건이던 세계 FTA 또는 EPA 체결국은 2005년 186건으로 빠른 증가 추세에 놓여 있음

정치적 한계로 인해 진정한 '열린 국가'의 길은 험난

□ 현실적으로 일본-ASEAN FTA전략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

-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FTA와는 별도로 ASEAN 전체와 FTA를 체결하는 이중 방식을 채택
- 일본정부는 ASEAN의 선발·후발국 간 경제격차로 개별 협상이 효과적이거나, ASEAN의 공통 현안에 대해서는 ASEAN 전체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비해 뒤쳐진 FTA 추진 실적을 만회하고, 개별 국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작용
- 그 결과 개별 국가와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어도 ASEAN과의 양허 수준이 더 낮아 무역효과가 왜곡될 소지

□ 일본 정치 시스템의 결함도 일본이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열린 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 일본은 전통적으로 정부-산업계 간 협업 시스템이 잘 작동
- 1980년대까지 '鐵의 三角形'이라 불리는 政-官-財 협력과 '護送船團形 산업정책'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정치·경제 시스템은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주식회사'로 성장하는 동력으로 작용
- 버블 붕괴 이후 과거의 성공 경험에 집착하여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글로벌화 진전 등에 대한 대응 실패로 장기불황을 겪었지만, 고이즈미 개혁 등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
- 하지만 고이즈미-아베 총리로 이어지는 정치권의 우경화는 부분적으로 동아시아 내에서 일본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운신의 범위를 잠재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고이즈미 정권의 '아시아 輕視主義的 외교 노선',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

등이 아시아에서 일본의 외교적 기반을 약화

- 인구구조 등에서 오는 자생적 성장 한계 극복을 위해 ‘열린 국가’를 내세우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투표권 등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가 걸림돌
- 일본은 중국을 의식해서 아시아 국가와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농촌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의 득표의식이 일본식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와 맞물려 걸림돌로 작용^{<64>}

□ 이 때문에 일본이 동아시아 통합을 술회하여 이끌어내고 일본시장의 문호를 실질적으로 개방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시

노동력 감소 대응책으로서의 외국인 인력 활용에도 한계

□ 해외노동력 유입은 일본의 노동력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인 하나이지만 그 효과는 한정

-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 내 低출산을 배경으로 청장년층이 감소하고 직종 간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연수·기능실습생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유입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현재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불법취로자까지 포함하더라도 100만명 수준에 불과^{<65>}
 - 이중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입을 촉진하고 있는 전문·기술 노동자는 1995년 약 6만명에서 2005년 8만 7천명, 2006년 11만명으로 증가
 - 기능실습생 등 반숙련 노동자는 섬유, 식품, 금속가공 등 비교적 저임금 직종을 중심으로 1995년 6,558명에서, 2005년 8만 7,324명으로 증가
 - 2000년 51만명 규모였던 비숙련 노동자 수는 최근 자동차, 전자산업 등

<64>ASEAN, 한국,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일본이 FTA(또는 EPA)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주요 대상국은 대부분 농업개방 문제가 핵심 협상 안건의 하나

<65>井口泰 (2007. 4. 6.). "움직이기 시작한 外國人政策의 改革과 外國人雇用展望" (勞動市場改革專門調査會 報告資料). 經濟財政諮問會議.

을 중심으로 파견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증가 등을 배경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 현재 58만명 수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추이

(천명)

-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취업목적의 체류자격자	68.8	125.7	154.7	178.5	185.6	192.1	180.5
- 기능 실습생 등	3.3	6.6	29.7	46.5	53.5	63.3	87.3
유학·취학 자격 외 활동	10.9	32.4	59.4	83.3	98.0	106.4	100.0
日系人 労働者 ^{주1)}	71.8	193.7	220.8	233.2	239.7	231.4	240.0
불법취로자	106.5	284.7	232.1	220.6	219.4	207.3	193.7
일반영주자 ^{주2)}		17.4	39.2	71.1	86.9	101.9	110.0
합계	26만+ α	62만+ α	75만+ α	83만+ α	87만+ α	90만+ α	91만+ α

주 1: 일본인 배우자 또는 定住者 자격으로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주 2: 특별영주자(재일한국인·조선인 등은 제외)

자료: 井口泰 (2007. 4. 6.). "움직이기 시작한 外國人政策의 改革과 外國人雇用展望" (労働市場改革専門調査會 報告資料). 經濟財政諮問會議.

- 외국인 노동자 유입 규모를 2030년까지 노동인구 감소분에 해당하는 1,700만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
- 2005~2030년 25년간 매년 12%씩 늘려야 가능한 수치이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불가능^{<66>}

□ 게다가 일본 내에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도 '노동인구 감소 대책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

- 일본정부(厚生労働省)는 외국인정책에 대한 개정 자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67>}

<66>일본은 ASEAN 제국과 經濟的提携協定(EPA) 체결에 기초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간호사·간호보조원 등의 인력을 유입하기로 했으나 그 규모는 천명 단위에 그치고 있음

<67>'청장년 고용 우선', '저출산이 진행되더라도 2030년까지는 노동력이 급감하지 않는다'는 등을 주장하며 외국인 노동자로 의한 일본인의 고용기회 박탈론'을 견지(井口泰 (2007. 4. 6.). "움직이기 시작한 外國人政策의 改革과 外國人雇用展望" (労働市場改革専門調査會 報告資料). 經濟財政諮問會議.)

- 동아시아 제국과의 FTA 교섭에서도 정작 '인적 이동'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
- 주로 상대국의 '노동자 수용' 요구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효활용 등은 경시

ASEAN과의 FTA(EPA) 교섭 시 '인력 이동' 문제에 대한 일본의 시각

- 대체적으로 일본은 투자 를 정비,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한 반면 ASEAN은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및 간호사, 간호보조원 수용 등 인적 이동에 관한 요구가 현저
- ASEAN의 요구에 대해 일본은 전문직·기술직 노동자 수용에는 적극적이지만 비숙련 노동자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외국인노동자 수용에 관한 기본 방침'을 고수
 - 필리핀을 예로 들면 일본 기준에 의거한 기술을 갖춘 간호사에 대해서만 개방하기로 하는 등 상대국과 간호사자격 상호 인증도 하지 않고 일본 간호사자격 취득자에 한해 취업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
 - 비숙련노동자의 국경간 이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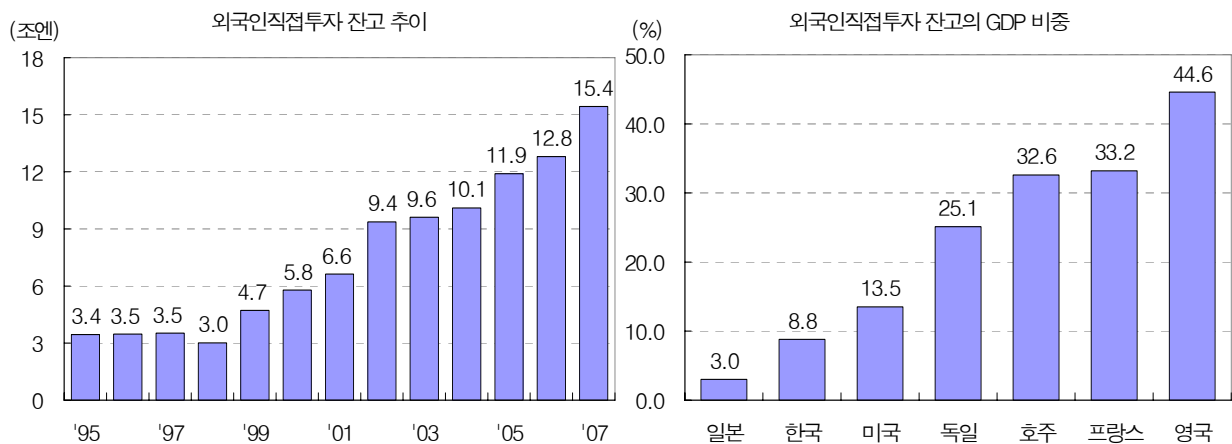
<井口泰 (2004. 9. 7), "外國人労働者 受容, 段階的인 定住策化으로 轉換을", 『日本經濟新聞』, p. 27.>

외국인직접투자에서도 보호주의와 배타주의가 팽배

- 외국인직접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타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태
- 일본정부의 외자유치정책 등에 힘입어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잔고가 2001년 6.6조엔에서 2007년 15.4조엔으로 증가
 - 고이즈미 정권은 '외국인직접투자 5년간 배증(2001년 기준 5년간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란 기치를 내걸며 외자 유치를 추진

- 201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잔고의 비중을 GDP 대비 5%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수립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
- GDP 대비 비중이 3.0%로 구미 선진국의 1/10 수준에 불과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잔고 추이 및 타국과의 비교



주 : 국제비교는 2006년말 기준

자료: 內閣府 財政諮問會議 (2008. 3. 28.). "第3回 「構造變化와 日本經濟」 専門調査會參與資料".

- 일본사업의 高코스트 유발 구조와 외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
-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일본사업의 高코스트 유발구조 해소가 외국인투자 촉진의 열쇠라고 주장하며 외국인투자 부진요인으로 외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 불명확한 룰과 규제 등의 존재를 강조

외국인직접투자 부진의 주된 요인(經濟財政諮問會議 지적)

- 高コスト 구조: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 가맹국은 평균 28%인데 반해 일본은 40% 수준
- 복잡한 절차: 기업 매수 룰이 불명확하고 관계부처 간 연계도 부족
- 외자에 대한 알레르기: 외자가 가져올 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외자 알레르기'에 의해 과잉반응, 과잉방어하는 경향
- 對日투자에 대한 불명확한 룰: '내외자본 간 무차별 원칙'과 '정부의 규제·방침·룰이 명확하지 않아 대일투자가 경원시(지금까지 개별 안전별로 대응하여 안전별 일관성이 결여)
- 낙후된 제도: 복잡한 제도 및 절차, 경쟁 제한적 상관행 등의 존재

□ 외자정책에 대한 정책 입안과 실행 간의 괴리에다 외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견제가 작용해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에도 한계

- 정책입안 단계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일본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외자유치에 우호적(總論 찬성)
- 인구 감소로 내수 확대에 한계를 안고 있는 일본경제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일본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로 인식

일본 재정경제자문회의가 평가하는 해외투자 확대의 효과

-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새로운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도입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업가치를 제고
-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제품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 해외에서 사람, 재화, 자본, 정보, 기술 등을 도입하는 것은 일본경제에도 새로운 자극이 되어 일본의 잠재력을 재생

- 하지만 실행단계에서는 안정보장, 위기관리능력 문제 등을 내세우며 외자에 대한 차별정책을 오히려 강화하는 사례가 다수(各論 반대)
- 일본정부는 2007년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외국인 투자지분이 10%를 넘을 경우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분야를 확대
- 최근 國土交通省이 나리타(成田)국제공항회사 및 日本航空빌딩회사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려는 법안을 입안한 것이 대표적 사례의 하나^{<68>}

공항정비법 개정안의 배경

- 2008년 2월 일본 國土交通省은 2009년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나리타 국제공항회사와 하네다(羽田)의 터미널 빌딩을 운영하는 日本空港빌딩회사(既상장)에 대해 외국인지분보유비율을 의결권의 1/3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안(공항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 國土交通省이 표면적으로는 안정보장을 내세워 외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國土交通省 관료들이 이 두 기관으로 낙하산 인사(아마쿠다리)를 통해 자리를 옮긴다는 점도 작용(伊藤隆敏 (2008. 2. 18), "被害 큰 空港外資規制". 『日本經濟新聞』, p. 25.)
- 2007년 호주의 투자펀드가 日本空港빌딩회사 주식을 20% 가까이 취득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직접적인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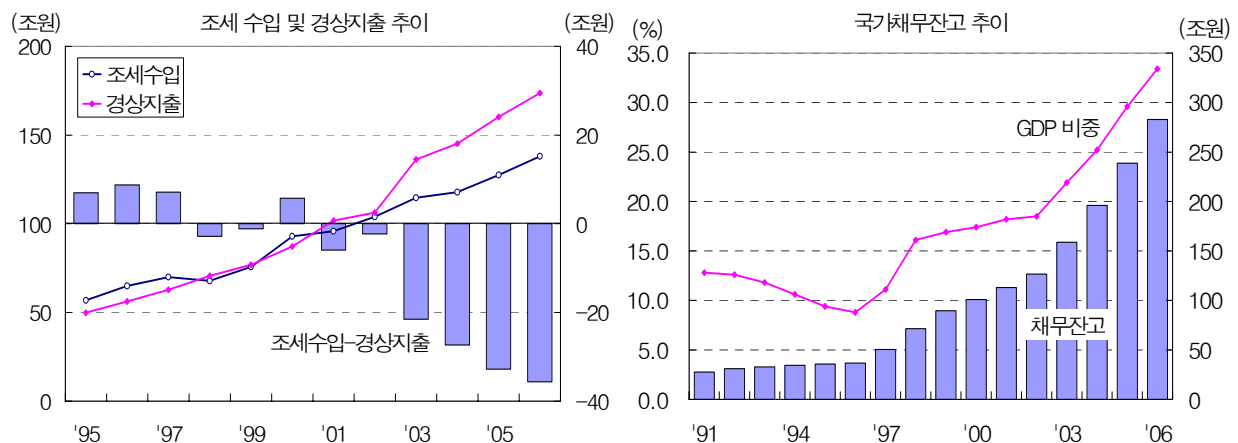
<68>후쿠다 총리가 2008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잠재적 해외투자자들에게 對日투자 확대를 요청한 직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외자규제 철폐, 외자 유치 등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규제, 차별화 등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로 주목

2. 시사점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국가채무잔고의 발산을 예방

- 아직까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잔고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증가속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
- OECD 통계에 따르면^{<69>} 2006년 한국의 국가채무잔고의 GDP 대비 비중은 27.7%로서 OECD 국가 평균(77.1%)에 크게 하회
- 한국의 국가채무잔고는 외환위기 이후 1997~2006년간 연평균 21.1% 증가
 - 특히 2003년 이후 조세수입의 증가 폭 이상으로 경상지출이 급증

국가채무잔고 및 주요 세수·지출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DB

- 앞으로 한국도 재정개혁 없이는 재정건전성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
-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 보건, 복지 등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확대됨으로써 재정지출이 팽창할 수 밖에 없는 여건

<69>OECD (2007), *Economic Outlook* (NO. 82). 국가채무잔고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합계)의 채무잔고를 의미

-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005년 11.0%에서 2023년 20.3%로 증가
- 반대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세수 여건은 전반적으로 악화
- 한국도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인구감소사회가 됨으로써 인구가 경제발전에 무거운 짐이 되는 소위 '인구 오너스(Onus)기'^{<70>}로 진입

□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 적극적인 혁신노력 없이는 행정 및 재정 수요 확대에 편승할 경우 정부의 재정도 급팽창
-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맡긴다'는 원칙하에 효율화를 통해 정부부문의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행정 서비스는 증대
- 예컨대 철도, 우정, 금융부문 등은 민간에게 최대한 위양하고, 국민연금 등과 같이 민영화가 곤란한 부문은 과감하게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화를 도모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 성장률 제고를 통한 안정된 세수 확보

- 재정지출 효율화를 전제로 할 때 경제성장률 제고가 재정수지 흑자화 및 흑자폭 확대에 결정적 역할
 - 일본 사례에서 볼 때, 잠재성장률 제고는 GDP 대비 재정수지의 흑자 비중을 가속화하고 반대로 잠재성장률 하락은 세수 확대 효과 이상의 속도로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
 - 경제성장률 제고는 인구증가율의 둔화를 억지함으로써 인구고령화 속도
- <70>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급증하는 상태(小峰隆夫, 可部繁三郎 (2007). 『長期經濟予測-2006~2050年』. 東京: 日本經濟究センター.).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고 총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統計廳, “將來人口推計”).

를 감속시킬 가능성

- 과거 경험을 볼 때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 간에는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존재^{<71>}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 간 상관관계

- OECD 국가의 1981년~2007년간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 간 회귀분석(Pooled-OLS)을 통해 양자간 단순 상관관계를 추정*

회귀분석 결과

-	계수	t값
상 수 항	1.97	12.9***
경제성장률	1.31	9.2***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

※ 인구증가율이 일방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국가(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일본, 한국, 대만 등)를 제외한 20개국에 대한 패널데이터의 최소자승 회귀법을 사용(IMF, World Economic Outlook Survey(April 2008 Edition)).

- 따라서 첨단지식산업, 소재·에너지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잠재성장력 제고에 주력

□ 추가적인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인구구조에서 오는 성장력 제고 및 그를 통한 세수 확대의 한계를 보완

- 재정지출 감축만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

- 세제 개혁 등을 통해 성장과 세원 확보를 동시에 달성

- 법인세,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어 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잠재성장력 제고 여건을 조성

<71>Becker, Gary S., Glaeser, Edward L. and Murphy, Kevin M. (1999).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9(2), 145-149.

- 반대로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여 세원을 확대하고 세수 누수도 방지
-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희망과 안심'을 약속할 수 있는 미래를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세대 간 수익 및 부담 격차 시정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

안팎으로 열린 국가를 지향

□ 적극적인 FTA 등으로 '안팎으로 열린' 국가를 실현함으로써 해외 시장과 자원을 국내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

- 적극적인 FTA 정책은 해외시장 확대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한국산업의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수단
- 한국은 기술강국 일본과 저비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사이에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힘든 경쟁을 지속
-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되 경제적인 타당성과 산업계의 실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
- 실질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 부품·소재, 환경·에너지 등 국내 취약 분야에 우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수요처 확보 등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메뉴를 제시할 필요

□ 향후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한국은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유지, 확보

-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한국경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자리매김

- 1990년~2007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연평균 19.8%(4만명→107만명)씩 늘어난 데 힘입어 총인구중 외국인 비중이 같은 기간 0.1%에서 2.2%로 증가^{<72>}
 - 3D 업종 종사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실상 한국경제의 하부구조를 지탱
 - 외국인 신부는 농림어업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73>}
-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 순혈주의에서 오는 편견과異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호존중하고 이해해주는 성숙된 사회를 조성
-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애써 확보한 고급인력이 오랫동안 국내에 정주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마련

<72>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73>2006년 농림어업 종사 혼인 남성(8,596명) 중 외국인 신부를 맞이한 비율은 41%(3,525명)(이삼식 외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 2007-1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록 1] 일본의 재정 전망

1. 기본적인 가정^{<74>}

□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가정

- 인구 동태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산하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의 인구추계치(2006년 12월 추계)를 활용
- 명목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가산하여 추계
 - 잠재성장률은 미즈호總合研究所의 추계치^{<75>}를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
 - 소비자물가는 일본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관리목표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1.5%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잠재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계치

(%)

-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20	'30	'40	'50
잠재성장률	1.5	1.8	1.9	1.8	1.7	1.6	1.6	1.5	1.5	1.5	1.0	0.6	0.0	-0.2
소비자물가	0.0	0.5	0.7	1.0	2.0	1.5	1.5	1.5	1.5	2.0	1.5	1.5	1.5	1.5

주: 2011년과 2016년 소비세율 인상을 전제로 물가상승폭을 조정

자료: 草場洋方 (2007). "日本 潜在 GDP의 長期推計-經濟活性化策의 效果 檢證, 現 經濟에 대한 인플리케이션을 가미하여". 『미즈호總研論集』, 2007年 Ⅲ号.

□ 세제, 제도 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변경 가능성이 예상되고 또한 변경될 경우 재정에 대한 영향이 큰 것만 고려하고 나머지는 현상유지를 가정

<74>기본적으로는 미즈호總合研究所의 "일본재정의 중기전망-2015년도까지의 일반회계와 국채발행 계획 전망"(미즈호 日本經濟인사이트, 2007년 9월 12일 발행)의 가정과 추계 내용을 전제로 2050년까지 연장(단, 소비세 및 소비세 인상시기 및 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가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계치 변동부분은 재조정)

<75>草場洋方 (2007). "日本 潜在 GDP의 長期推計-經濟活性化策의 效果 檢證, 現 經濟에 대한 인플리케이션을 가미하여". 『미즈호總研論集』, 2007年 Ⅲ号. 노동투입량 감소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감소 트렌드를 나타내고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

- 재정정책의 기본노선은 고이즈미 정권 이후의 세출 삭감·재정재건 노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76>}
- 소비세는 2011년 4월부터 현행 5%에서 7.5%로 인상되는 것을 가정^{<77>}
 -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였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을 인상하는 시점과 같은 시기(2009년도)에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실정
 - 2009년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 인상 등에 따른 국고부담 증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현재 소비세 인상이 가장 유력시
- 법인세는 소비세 인상에 앞서 2010년 4월부터 인하(법인세의 기본세율을 현행 30%에서 25%로 5%p 인하)하는 것으로 가정^{<78>}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법인실효세율 인하는 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세제개정의 핵심안건

□ 금리

- 정책금리는 목표금리(잠재성장률+ 목표 인플레이션율)를 향해 완만한 속도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 예컨대 콜 금리는 2011년 2.25%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에는 완만하게 하락하여 2015년 경에는 1.75%를 유지
- 장기금리도 정책금리의 가정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나 2015년 이후부터는 상승세가 정체될 것으로 가정
 - 경기 변동성 저하에 고령화를 동반한 '장기자산운용 니즈'의 확대 등으로 인해 장기로 갈수록 금리 상승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76>참의원에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기존정책 노선이 급격하게 전환된다거나, 차기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교체 및 재정정책의 크게 바뀔 수도 있으나, 그에 대한 가능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

<77>미즈호總合研究所 (2007)의 앞의 책에서는 2010년에 7%로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현재 민주당이 소비세 인상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소비세 인상시기를 1년 연기하는 것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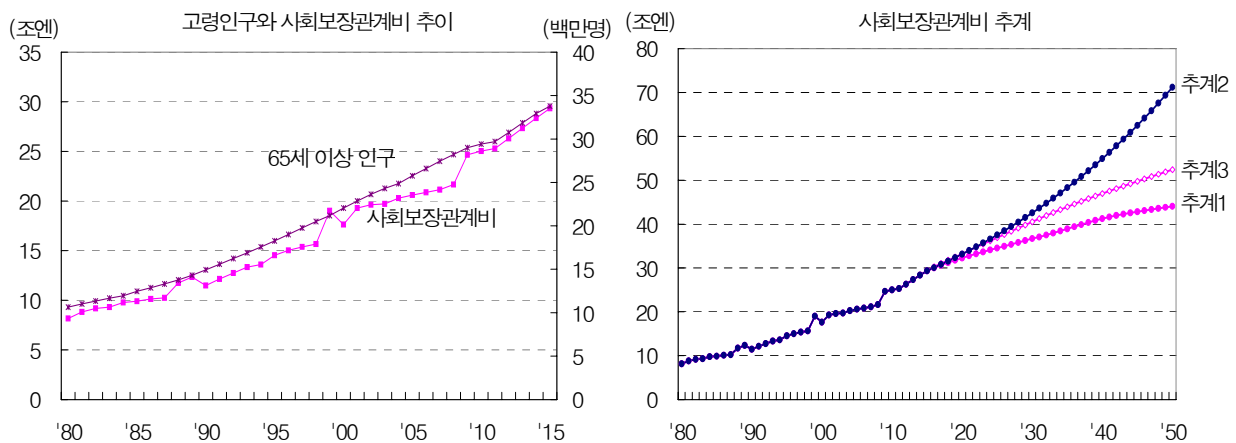
<78>기타 세제는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고려대상에서 제외

2. 일반세출 추계

□ 사회보장비 추계

- 사회보장비는 일반세출에서 가장 지출규모가 큰 항목으로서 생활보호비, 사회복지비, 사회보험료, 보건위생대책비, 실업대책비 등으로 구성
- 과거 추세를 볼 때 사회보장비는 65세 인구의 규모와 밀접한 관계^{<79>}를 나타내었으나 향후 인구 감소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보장비의 증가속도는 고령인구 증가속도를 능가(고령화율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 1980~2015년 사회보장 관련 지출과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관계를 비교하면 거의 일치(결정계수가 0.9857)^{<80>}
- 3가지 시나리오(고령화율, GDP 증가속도, 최근 5년간 사회보장비의 증가속도)를 가정하여 사회보장비를 추계

사회보장비 추계



주: 추계1은 고령화율, 추계2는 최근 5년간 증가속도, 추계3은 GDP를 기준으로 한 추계

자료: 財務省; 内閣府; 미즈호總合研究所 (2007)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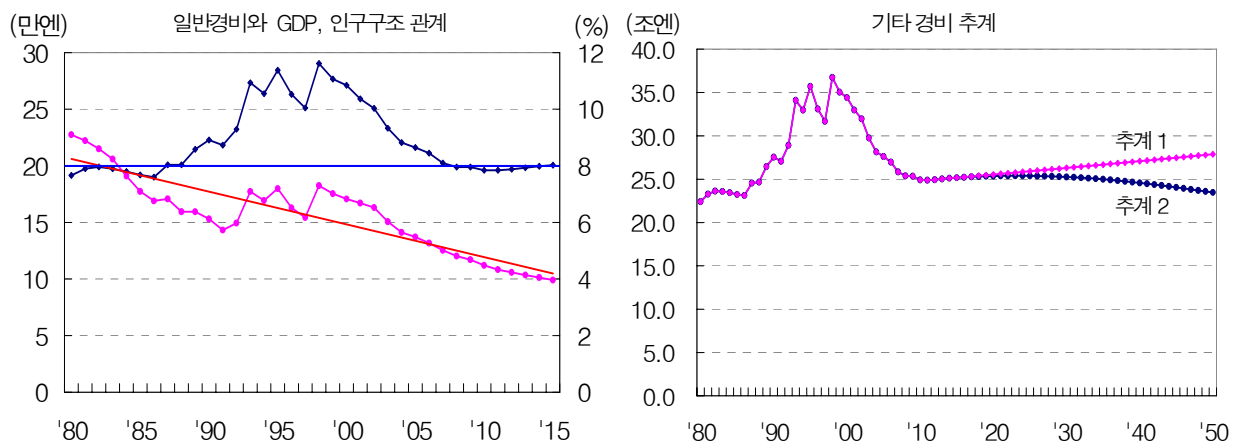
<79>사회보험비는 연금·의료 등과 관련한 국고부담분으로서 사회보장관계비의 대부분(2007년 기준 80%)을 차지하는데, 이는 연금수령자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

<80>2009년 이후 사회보장관계비가 급증하는 것은 2009년 4월부터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중이 종전 1/3에서 1/2로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한 데 따른 결과

□ 기타 경비와 지방교부세 교부금 추계

- 기타 경비는 일반세출 중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로서 주로 공공사업관계비, 문교·과학진흥비, 방위비 및 기타 비용으로 구성
- 고이즈미 정권 이후 트렌드를 반영하여 추계
 - 공공사업관계비, 문교·과학진흥비, 방위비 및 기타 비용 대부분 2010년대 정부 방침에 의거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2012년 이후는 거의 불변 또는 미미한 증가세
 - 1980~2015년 일반세출에서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를 총인구로 나누면 일인당 약 20만엔으로 거의 불변(단, 1990년대 불황대책으로 팽창된 공공사업비를 제외할 경우에 성립)

기타경비 추계



주 1: 기타경비는 일반경비에서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나머지(공공사업관계비, 문교·과학진흥비, 방위비 등)

주 2: '추계1'을 2000년대 후반에서 2015년 추세를 반영, '추계2'는 추계1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추계

자료: 財務省; 内閣府; 미즈호總合研究所 (2007)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 지방교부세교부금은 GDP와의 상관관계^{<81>}에 입각하여 추정
 - 추정식: $\ln(\text{지방교부세교부금}) = -3.63 + 0.02135 \times \ln(\text{명목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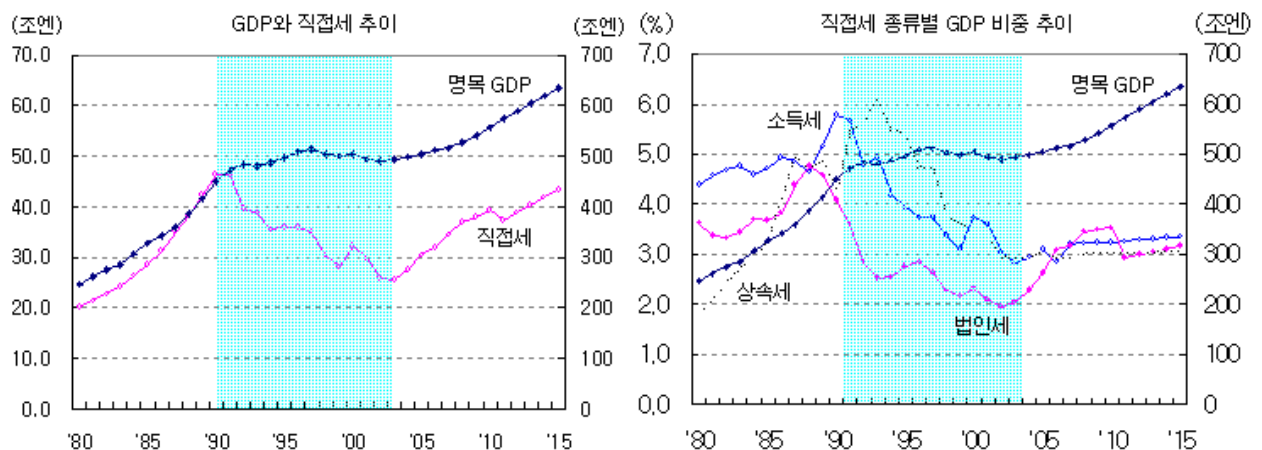
<81>결정계수 0.8687, t-value 14.998

3. 일반세입 추계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직접세는 GDP 수준에 연계하여 변동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직접세는 GDP의 추이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화^{<82>}
 - 1980년대와 2003년 이후와 같이 일본경제가 성장국면일 때는 직접세가 늘어나는 동시에 GDP 대비 직접세의 비중도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
 - 반면 1990년대 경제성장이 정체된 국면에서는 다양한 조세감면정책 등의 발동으로 인해 세수도 빠른 속도로 감소
- 향후 일본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직접세는 GDP 대비 일정한 비율로 증가
 - GDP 성장국면에서는 GDP 대비 직접세 비중도 증가하지만, 일본경제의 장기성장률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점을 감안하여 직접세의 증가속도는 GDP 증가속도에 연동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직접세 추계



주: 상속세의 GDP 대비 비중은 당초 수치에다 10을 곱하여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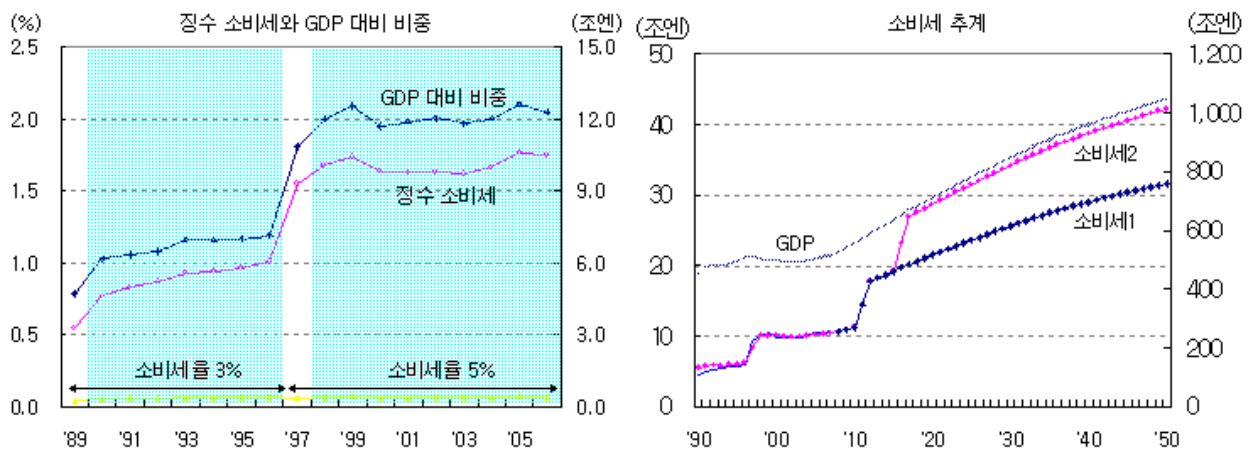
자료: 財務省; 内閣府; 미즈호總合研究所 (2007)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 소비세는 소비세율 및 GDP에 연동하여 변화

<82>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결정계수 0.381, t-value 4.578)

- 소비세율을 1% 인상할 경우 징수소비세는 GDP의 0.403% 증가
 - 1989년 소비세 도입(소비세율 3%), 1997년 소비세율 인상(3%→5%) 후 GDP, 징수소비세, 소비세율의 관계를 보면 거의 일치^{<83>}
 - 소비세율 도입·인상 후 1년 정도 경과하면 GDP와 징수소비세는 거의 일정한 비례 관계를 유지
 - 따라서 2007년 GDP 기준 소비세를 2.5% 인상할 경우 약 5.2조엔의 세수 증가가 예상
- 소비세율을 2011년에 5%에서 7.5%로 인상하는 경우와 2016년에 10.0%로 추가로 인상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추계

소비세 추계



주: 추계1은 2011년에 소비세율이 7.5%로 인상된 경우이고 추계2는 2016년에 同 10.0%로 인상된 것을 전제로 한 추계

자료: 財務省; 内閣府; 미즈호總合研究所 (2007)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 기타 조세 및 기타 수입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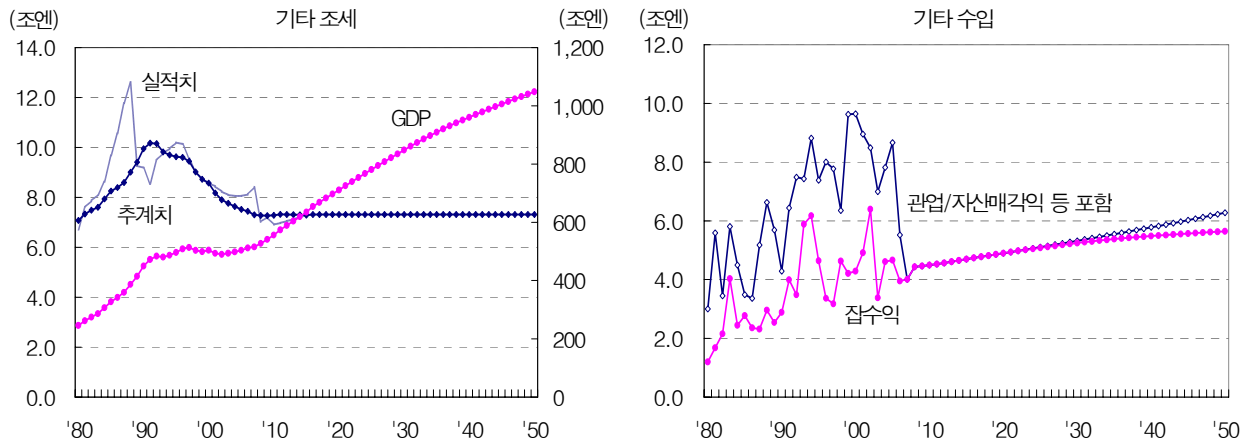
- 기타 조세는 주세, 휘발유세, 자동차중량세, 관세 등 다양한 세목으로 구성되고 각 세목별로 다양한 증감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 또는 현상 유지^{<84>}

<83>세율을 조정한 후 GDP와 소비세 간 회귀분석 결과(결정계수 0.975, t-value 25.012)

<84>잠정세율 폐지에 따른 휘발유세, 자동차 중량세 등 국세 감소분 1.7조엔 조정

- 기타 수입은 잡수익, 관업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는 형태

기타 조세 및 기타 수입 추계



국채비 및 공채발행액(일반 국채발행액) 추계

□ 국채비와 공채발행액은 세수, 세출, 시중금리, 공채잔고 등과 상호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추정<85>

- 일반회계에서 세출(=일반세출+ 국채비)과 세입(세수+ 공채발행액)의 등식 관계에서 국채비와 공채발행액은 상호 연동
- 세입·세출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가 변하면 다른 요소도 차례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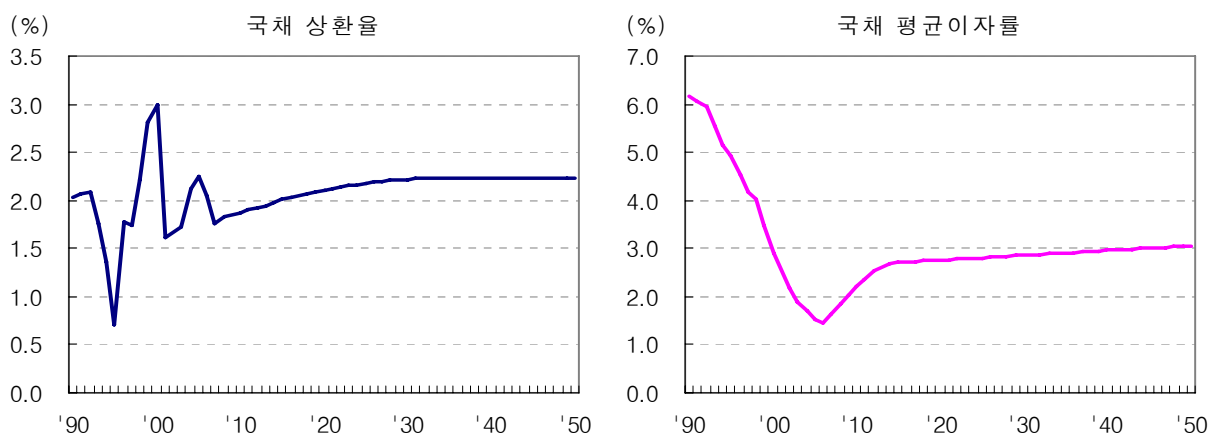
국채비와 공채발행액과의 관계

- 일반세출+ 국채비 = 세수+ 공채발행액
- 국채비 = (국채·차입금 상환액)+(국채·차입금이자)+ 국채사무취급비
- 국채이자 = 전기 말 공채잔고 × 공채의 평균이자
- 당기 말 공채잔고 = 전기 말 공채잔고 + 공채증가액
- 공채증가액 = 공채발행액 - 국채상환액

<85>국채비는 향후 국가재정운영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항목으로, 세수, 세출, 시중금리 등과 같은 거시경제 관계 지표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채발행 및 상환계획 등에도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정을 위해서는 많은 가정이 필요

- 국채이자(공채평균금리)는 정부의 정책금리가 목표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일정수준에서 정체하는 것으로 가정
- 국채지급이자(채무의 가중평균이자율)는 채무의 가중평균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공채의 가중평균금리는 2007년 1.57%에서 상승하는 기조에 있기는 하나 2014년 2.18%를 정점으로 안정된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국채상환 패턴, 공채평균이자율은 일정 기간 완만한 상승을 보인 후에 정체하거나 미미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
- 국채는 '60년 상환 룰'에 의거하여 전년도 말 공채잔고의 1.6% 정률상환분과 기타 감세 특례상환분 등을 감안하면 연간 최소 1.8%는 상환
- 장기금리도 정책금리의 상승에 따라 일정 수준까지는 가파른 상승을 보인 후 안정된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국채 상환율 및 국채 평균이자율에 대한 가정



- 공채의 가중평균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공채 신규발행 규모가 거액이기 때문
- 이 때문에 공채잔고도 증가^{<86>}

<86>공채의 신규발행은 이자의 채원 확보를 위함. 즉 공채잔고 증가→ 이자 증가로 이어지는 관계가 성립하는 동시에, 이자 증가 → 공채 신규발행액 증가 → 공채잔고 증가의 관계가 성립

[부록 2] 일본의 FTA 전략

□ 일본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정치·외교적 목적에서 FTA를 추진

- 일본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하여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확보
- 수출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함과 동시에 경쟁 조건을 개선
- FTA 협상 결과를 WTO로 확대함으로써 WTO 협상에서 일본의 협상력 증대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 상대 국가와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상호 정치적 신뢰관계를 제고하고 日本의 외교적 영향력과 이익을 확대

□ 일본은 경제 및 정치·외교 전략상 동아시아 지역을 최우선 협상대상국으로 하여 FTA를 추진

- 동아시아 지역과의 FTA는 북미, 유럽에 비해 더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평가
- 관세율(단순평균 관세율 기준)만 보더라도 미국 3.6%, EU 4.1%인데 반해, 중국 10%, 말레이시아 14.5%, 한국 16.1%, 필리핀 25.6%, 인도네시아 37.5% 등 동아시아 지역의 관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
-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는 대상으로서 일본기업이 현지에서 보다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최우선 협상 대상
-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목적에서도 아시아 지역과의 FTA 추진이 필요

- 상대국과의 '경제관계 상황'에 따라서 FTA 이외에 다른 제휴방식(투자 협정, 상호승인협정, 투자환경 정비 등)도 적극 수용
 -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ASEAN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은 무역 확대 뿐만 아니라 자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보호하고 상대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자국과 조화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과제
 - 이 때문에 단순 FTA보다는 인적교류 확대, 각 분야별 경제협력 강화, 투자규제 철폐 및 투자 를 정비, 지적재산권 및 경쟁정책의 조화까지 포함하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제휴협정)를 선호^{<87>}
 - 일본은 EPA 방식이 정치·외교 전략상 자국에 보다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

□ FTA 체결속도 가속화 및 FTA 성과 획득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 2006년 3월에는 FTA 체결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3대 지침을 발표
 - 기체결 협정 결과를 살려 교섭 개시 당초부터 상대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협정조문案을 제시
 - 상대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감안하여 협상대상을 다양화(당초 EPA 방식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등으로 협상대상을 유연하게 설정)
 - 상대국에 따라서는 공동연구 등 협상 예비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협상을 시작하는 방식도 채택
- 2007년 5월에는 'EPA 추진계획'을 통해 2007~2009년 동안 FTA 체결국을 12개국 이상으로 늘리고, 2010년까지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을 현재의 11%에서 25% 이상으로 높인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 현재 멕시코 등 5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이며, ASEAN 등과 4건의 협정을 체결하였고 GCC 등 6건은 협상 진행 중

<87>일본정부는 FTA가 '물품의 관세 및 서비스 무역의 장벽 등을 삭감 또는 철폐하는 협정'인 반면, EPA는 'FTA를 주로 하되 사람, 물품, 돈의 이동의 자유화·원활화를 위해 폭넓은 경제관계의 강화를 꾀하는 협정'으로 정의

<참고문헌>

- 松谷昭彦 (2005). 『고령화·저출산시대의 경제공식』 (김지효 역, 구본관 감수). 서울: 명진출판사. (원전은 2004년에 출판)
- 삼성경제연구소 (2007). "한국경제 르네상스를 위한 재정운용 전략" (연구보고서)
- 이삼식 외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 2007-1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KOSIS DB.
- 加藤久和 (2008). "90年代 財政運營과 減稅政策의 評價". 『會計檢査研究』, 第37號, 29-42.
- 經濟同友會 (2006). "人口減少社會에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2050년까지의 日本을 생각한다".
- 經濟産業省編 (2006). 『新經濟成長戰略』. 經濟産業調査會.
-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 將來推計人口(2002년 1월, 2006년 12월)".
-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7). 『社會保障費統計資料集』, 平成19年度遡及版.
-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 世帶數의 將來推計(2008년 3월 全國推計)".
- 內閣府. 『經濟財政白書』. 各年호.
- 內閣府 財政諮問會議 (2006. 7.). 「財政經濟運用과 構造改革에 관한 基本方針 2006(基本方針 2006)」.
- 內閣府 財政經濟諮問會議 (2007. 1.). "日本經濟의 進路和 戰略-새로운 '創造와 成長'에로의 길".
- 內閣府 財政經濟諮問會議 (2008. 1.). "日本經濟의 進路和 戰略-열린 나라, 全員參加의 成長, 環境과 共生".
- 內閣府 財政經濟諮問會議 (2007. 6.). 「經濟財政改革의 基本方針 2007-'아름다운 나라'로의 시나리오」.

- 內閣府 財政經濟諮問會議 (2007. 6.). "經濟成長戰略大綱".
- 內閣府 財政經濟諮問會議 (2007. 8.). "平成20年度豫算의 全體像".
- 內閣府 財政經濟諮問會議, 각종 의회 배포자료(平成19年과 平成20年).
- 內閣府 經濟財政諮問會議 (2008. 2. 15.). "新雇用戰略에 대하여", "對日直接投資에 대하여". 經濟財政諮問會議 平成20年 第3回 議事.
- 內閣府 財政諮問會議 (2008. 3. 28.). "第3回 「構造變化와 日本經濟」 專門調查會參與資料".
- 鈴木準 (2008. 1. 18.). "總論: 浮上인가 失束인가, 成長進路의 기로". (資本市場調査部情報). 大和總研.
- 鈴木 準 (2008. 4. 9). "埋藏金 전용과 財政收支". (資本市場調査部情報). 大和總研.
- 櫓浩一 (2006. 3. 7.). "日本經濟의 構造變化: 貯蓄率 제로 時代에 대비하여 資本을 效率化하라". 『이코노미스트』, 86-88.
- 木下康司 (2006). 『日本の 財政』.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 미즈호總合研究所 (2006. 10. 17). "公的年金의 空洞化 實態와 요구되는 對策". (미즈호日本經濟인사이트).
- 社會經濟生産性本部 (2007), 『生産性年次報告書』.
- 森田富治郎 (2007. 4. 11.). "日本の 未來는 정말 팬창은가- 재차 문제시하는 少子化對策." 經濟同友會提言·意見書.
- 信用中央金庫總合研究所 (2008. 2. 6.). "高齡化의 進展과 財政再建問題-消費稅率 引上이 不可缺少나 抜本的인 歲出削 減斷行이 前提條件" (內外經濟金融動向 NO. 19-10).
- 櫻川昌哉, 細野薰 (2008. 2.). "日本財政의 維持可能性 Calibration: 日本財政의 將來予想". <www.econ.keio.ac.jp/staff/masaya/index.html>
- 櫻川昌哉, 細野薰(2008. 3. 26.). "日本の 財政維持可能性 試算", 『日本經濟新聞』. p. 27.
- 原田泰, 鈴木準, 長內智 (2007. 10. 25.). "基礎的財政收支 赤字 脫殼 後에도 社會保障 抑制나 增稅가 必要" (이코노미스트情報). 大和總研.
- 日本經濟研究센터(2008.) "第34回 中期經濟豫測(2007~2020年度)"
- 日本經濟研究센터 (2007. 1.). "長期經濟豫測(2006~2050年), 人口가 바꾸는

- 아시아-2050年 世界の 모습".
- 日本総合研究所 (2007). "高齢化가 日本經濟에 미치는 影響".
- 長谷川公一, 堀雅博, 鈴木智之 (2004). "高齢化·社會保障費 負擔과 매크로 經濟-日本經濟 中期展望 모델(Mark I)에 의한 시뮬레이션 分析"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No. 121). 內閣府 經濟社會總合研究所.
- 財務省 (2004. 11.). "國債管理政策의 現狀과 今後展望".
- 財務省. 『財政金融統計月報』. 각호.
- 跡田直澄 외 (1999. 6.). "日本の 所得課稅를 뒤돌아보다" (과이넨셜 리뷰 NO. 50). 大藏省財政金融研究所.
- 井口 泰 (2007. 4. 6.). "움직이기 시작한 外國人政策의 改革과 外國人雇用展望", (勞動市場改革專門調査會 報告資料). 經濟財政諮問會議.
- 井堀利宏 (편) (2004). 『日本の 財政赤字』. 東京: 岩波書店.
- 中里 透 (2007). 『經濟財政 데이터 북-平成19年版』. 東京: 學陽書房.
- 中小企業廳, 『2006年版中小企業白書』.
- 川又三智彦 (2006). 『2017년 日本시스템의 終焉』. 東京: 光文社.
- 青木昌彦, 鶴 光太郎 (2006). 『日本の 財政改革-國家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까』.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 草長洋芳 (2007. 9. 12.). "일본 財政의 中期展望-2015年度까지의 一般會計와 國債發行計劃의 전망". (미즈호日本經濟인사이트). 미즈호總合研究所.
- 草場洋方 (2007). "日本 潛在 GDP의 長期推計-經濟活性化策의 效果 檢證, 現 經濟에 대한 인플리케이션을 가미하여". 『미즈호總研論集』, 2007年 III號.
- 土居丈朗 (2007. 12. 3.). "巨額 赤字에도 低金利의 수수께끼", 『日本經濟新聞』. p. 23.
- Bohn, Henning (1999). Fiscal Policy and the Mehra-Prescott Puzzle: On the Welfare Implications of Budget Deficits When Real Interest Rates Are Low.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1(1), 1-13.
- Gale, William G. and Orszag Peter R. (2004). The US Budget Deficit On an Unsustainable Path. New Economy, 236-242.

IMF,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October 2007 Edition, April 2008 Edition).

OECD (2007). OECD Economic Outlook, (NO. 82).

Poncet, Sandra (2006). The Long Term Growth Prospects of the World Economy: Horizon 2050. (No. 2006-16), CEPPII.

Wilson, Dominic and Purushothaman, Roopa (2003).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Global Economics Paper No. 99). Goldman Sachs.

內閣府 홈페이지(www.cao.go.jp)

日本銀行 홈페이지(www.boj.or.jp)

財務省 홈페이지(www.mof.go.jp)

財務省, 財政 데이터集(www.mof.go.jp/zaisei/con_07.html)